

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오부치총리는 "정치권에서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은 이른바 화교 등 한국내 정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검토는 긍정 부정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 1999/05/18

### [사회I면톱] 화교 다시 일어선다 .. 경제인협회 공식인가

한국화교들이 재기의 기틀을 다지고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정부의 화교억제정책으로 홀대받으며 뿔뿔이 흩어졌던 화교들.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이 대전환을 하자 화교들이 세계의 화교 상권과 한국경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다짐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기업인들은 지난 14일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화교 경제인협회 설립인가를 받았다. 오는 27일 창립기념식이 개최된다. 화교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을 출범시키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 협회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미상공회의소나 주한EU상공회의소처럼 화교경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위안귀등 협회이사장은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화교가 제일 적은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화교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기업이 중국 등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 등 화교경제권이 급성장한 데다 국민의 정부들어 외국인투자를 대폭 자유화하는 등 개방정책이 실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위안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소외된데다 한국과 대만과의 단교이후 중국과 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고 털어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벌인다. 6월중순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화상협회 본부를 방문한뒤 7월에는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화교상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협회관계자는 "화교를 박해했던 나라라는 인식을 씻도록 하는게 제일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첫번째 사업으로 인천시와 함께 송도 미디어밸리에 차이나 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5만평의 부지에 5만명의 화교가 거주할수 있는 이 타운은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자를 유치해 지어진다.

위안 이사장은 이미 대만 최대의 부동산회사인 신리엔양그룹 린 징 웨이 총수가 차이나타운 건설에 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의 화교가 운용하는 한 카지노그룹도 5억달러가량 투자해 송도에 카지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모두 화교들의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미국 등 각지로 흩어진 한국화교들을 자신들의 본거지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년대초 한때 50만명에 달했던 화교들은 62년 화폐개혁과 외국인토지취득을 제한한 토지법 개정을 계기로 재산을 상당부분 잃은채 해외로 이주했다. 현재는 2만5천명이 출입국관리소

에 등록해 있고 거의 대만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산동성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중국식당,소매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 일부가 한의원 학자등 전문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말을 할줄 알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국화교중 해외로 이주한 화교는 약10만여명으로 미국에 8만여명, 대만에 2만여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코리아타운 근처에 자리를 잡는 등 한국인과 가까이 있다.

위안 이사장은 "장기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이 단기거주하는 외국인들처럼 2년에 한번씩 재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영주권법을 제정해 장기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동아일보 : 1999/05/18(화)

### [라운지] 화교경제인협이사장 원국동씨 「가교역 할 것

"정부가 국내 화교들을 대등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죠."

한국화교경제인협회 이사장 원국동(袁國棟·41·한의사)씨는 화교협회가 설립 허가를 받는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다. 한국화교한의사협회 한국화교약사회 재한화교학자협회 한국중화요식업협회 등 국내 화교단체 대표 30여명으로 이뤄진 화교협회는 외국인만으로 이뤄진 비영리사단법인으로는 처음으로 19일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는다.

원씨는 "한국에는 이민법이 없기 때문에 화교도 영주권을 가질 수 없으며 5년에 한번씩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뿐" 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외국인들은 작년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상업용지는 50평까지, 주거용지는 2백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화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인 국내 화교 12만여명 중 10만여명이 이민했다. 그렇지만 이민을 가서도 코리아타운 곁에 모여 살 정도로 국내 화교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뿌리깊다는 것.

원씨는 "우리는 스스로 한국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화교를 이용하기 위해 선심을 쓴다' 고 생각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오히려 '조국' 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고맙다는 것. 원씨는 무엇보다도 "국내 화교들이 동남아 화인경제권과 한국의 경제교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조선일보 : 1999/05/23(일)

### [영남] 화교들은 소리없이 떠나...

화교들이 떠나고 있다. 한중수교이후 중국대륙과의 직교역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화교들은 대만과 중국 또는 외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부산의 경우 현재 화교 수는 2000명 정도. 일부는 한국에 귀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구 초량동의 이른바 '청관거리' 일대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 급격히 인구가 줄기 시작해 현재 200여 가구, 18개 상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생도 중고교 합쳐 300명 선이다. 초량 화교번영회수예팅(35) 총무는 "초량지역 화교 수는 20년전 2000여명에 서 지금은 60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는 현재 1500여명의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다. 화교 학생 수는 260여명이다. 한 때 대구지역에만 3000명 이상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다. '차이나타운'과 같은 집단 거주지는 없다. 대부분 음식점을 운 영하고 있고,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10명 남짓하다. 자주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건국기념일인 10월10일의 '쌍십절'과 10월21일의 '화 교교민의 날' 등 경축일에는 한데 모여 정보교환과 안부를 묻기도 한다.

울산의 화교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공단의 특성상 중소기업 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늘고 있다. 94년 391명에서 98년 827명이 되었다. 이들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조선족으로, 체류기간 은 6개월~1년이다.

화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수예팅총무는 말했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한국의 문화풍토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대륙과의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화교들의 '일 거리'가 늘고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말과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

수총무는 "무역업이나 여행사 등 새로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부산과 중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최근 청관거리에 '상하이 거리'를 조성하는 등 화교 끌어 안기에 나섰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름에 걸맞게 특성있는 상가로 발전 시켜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수기자 : wspark@chosun.com)

(신동훈기자 : dhshin@chosun.com)

동아일보 : 1999/07/22(목)

### [독자편지]김수옥/휴대폰料 자동이체 외국인 차별

화교 2세대. 지난해 10월 016 PCS에 가입하고 전화요금은 자동이체로 신청했다. 그런데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되지 않고 연체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의 나의 신상정보가 잘못됐는지 몇차례 확인했지만 잘못이 없었다.

나중에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PCS회사는 "외국인은 자동이체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을 차별하는 부당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김수옥(인천 남구 도화동)

동아일보매거진 뉴스플러스 1999/07/29(194호)

### "차이나타운조차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장면의 면발에 달려 있다."

한국화교 사회에 커다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어느 주방장의 고백이다. 실제로 성공한 중국 요리집 요리사들마저, 예를 들어 63빌딩 중식당의 마(馬) 부주방장도 자신의 진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다. "한국 땅에서 화교로 살면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중국요리사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국수를 잘 삶지 못해 국자로 얻어맞기도 했지만 '이 길만이 내 길'이란 생각에 참아냈습니다." IMF 사태 이후 다급해진 우리가 화교자본을 찾아 나서면서, 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차이나타운도 없고, 홍콩의 리카싱(李嘉誠) 같은 대부호 화교도 없는지 궁금해 한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잔재 중 하나가 화교에 대한 차별정책 내지 화교에 대한 적대감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민망해 한다.

이 땅의 영주거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화교에 대한 차별은 이제 우리의 세계화 전략에 최대 장애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화교의 지방참정권이나 6·25 참전 화교에 대한 연금이나 치료 문제는 우리의 '안으로 들이는 세계화' 실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로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모순된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화교를 '영원한 이방인'으로 간주할 것인가.

지금의 플라자호텔을 중심으로 소공동 일대에는 제법 규모를 지닌 차이나타운이 약 100여년의 세월을 두고 이뤄졌다. 60년대 이후 초고속 개발로 서울의 지도가 급속히 바뀌면서, 소공동의 차이나타운은 약간의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서울의 화교들은 이제라도 소공동과 명동 쪽에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대문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지닐 정도로 차이나타운은 역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될 뿐이다.

초등학교 26곳...신세대들 현지화에 적극적

1999년 현재 화교초등학교는 전국에 모두 26군데. 1만여명에 이르는 화교가 미국 등지로 이민하는 대탈주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화교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딱지를 치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70년대 대량 이민 이후, 더욱이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미사상이 고취되면서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이 한층 강화되자, 화교 아이들은 점차 골목길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40대 이상이 아직 어눌한 우리말을 구사한다면, 신세대 화교는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말이 유창하다. 해외의 선배 화교들처럼, 한국의 신세대 화교들은 현지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화교가 차별받던 역사는 단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귀화를 포함해 현지에 동화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이다.

현재 연희동 화교학교 재학생 1100명 중 300여명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그 만큼 현지화의 속도는 빠르다. 이전에는 상당수가 대만의 대학으로 진학했지만, 요즘에는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부모 양쪽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특례입학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화교 자체의 국내 대학 진학을 가로막고 있다. 만약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만을 고집하거나 완전귀화를 막무가내로 요구한다면, 미국의 소수민족 우혜대책에 특혜를 누리는 우리 교민들은 단지 한국의 화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화교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길은 그들이 완전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나름대로 유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

두가 지녀야 한다.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공자가 설파한 '조화하면서도 동화되지 않는다'(和而不同)의 논리에도 들어맞는다. 그것은 세계화 시대의 화교들이 새로이 찾아야 할 생존전략의 방향이면서 아울러 우리가 그들의 이질성을 포용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근본자세인 것이다.

지난 3월 김대중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국내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는 솔직히 많은 한국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민감한 사항을 김대통령이 돌연 제기한 속사정이 실제로 주한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제일교포의 지방참정권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전략의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제일한국인은 조총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참정권 운동을 전개, 일본지역 지자체의 42%에 달하는 1383개 지방의회의 지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일본정부의 상호주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먼저 제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김대통령이 귀국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자 관련부처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각국의 판례와 입법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는 단순한 법규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국민정서'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돼야 할 이슈다.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연 국내 거주자격을 지닌 2만2600여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만국적의 화교 2만1900여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얼마나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현재 약 1만여명의 화교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작을 것이다. 최대 밀집지역인 서울에서조차 화교의 유권자는 많지 않을 듯 싶다. 96년말 통계에 근거하면 서대문구에 2030여명, 중구에 1618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다. 결국 화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일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에는 요코하마 등 대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선 곳이 제법된다. 뿐만 아니라, 제일한국인은 한국의 화교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 단지 화교라는 이유로 경찰서, 국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각 구청에 바쳐야 했던 뇌물의 액수는 최소 두 배 이상이었다고 회고한다. 아직도 경찰을 보면 오줌이 저린다고 고백하는 노인 화교가 한두 명이 아니다.

#### 다양성 인정하는 '열린 민족'의지 보여줘야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와 민주화에서 아시아의 선봉에 서고 아울러 제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일본의 여당에 상호주의의 구실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진실로 국민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인천의 선린동과 송도의 차이나타운, 부산의 상하이 거리 조성 등에 지방자치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이나타운이나 중국인 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화교와 우리 사이의 과거청산이나 화해노력의 상징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안으로 들이는 세계화'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민족'으로 발전하려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일 수 있다.

정부가 차이나타운 추진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인 다음에 비로소 정

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우리 국민도 막연한 외국인 혐오증에서 벗어나 '안으로 들이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6·25참전 화교에 대한 무관심이 보도되면서 "우리가 너무했다"는 여론이 급속히 형성되는 현상도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양필승/ 건국대 교수·서울 中國學中心 대표

동아일보 : 1999/08/06(금)

#### [부산/경남]부산역 부근 '상하이 거리' 만든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옛 청관골목 일대에 '상하이(上海)거리'가 조성된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 이 일대 1만8600평에 상하이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6일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과 상하이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의 문' 기공식을 갖는다. 상하이거리 입구에 세워질 이 문은 중국 전통 양식을 본따 지붕은 2중 구조이고 처마끝은 하늘로 치켜 올려져 웅장한 느낌을 주는 조형물로 11월 말경 준공될 예정이다. 기둥간 거리는 11.68m, 전체 높이는 10.4m 규모.

이 지역은 1884년 청나라 관리들이 머물며 공관으로 사용해온 '청관(淸官)'이 설치됐던 곳으로 지금도 화교 초등학교와 부산화교협회, 화교상가 등이 몰려 있다. 동구청은 우선 시비 25억원을 들여 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확장공사와 전선 지중화사업, 중국식 가로등 설치사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중국을 상징하는 건물과 중국인 관광객 전용상가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키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동아일보 : 1999/08/12(목)

#### [시론]고원정/'열린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 시절,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세계지도는 우리의 것과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난다.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에 놓이고 유럽이 한복판을 차지한 그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당연하게도 제일 오른쪽 귀퉁이로 밀려나 있었다. 그제야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리켜 극동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 대륙을 가운데 얹혀놓은 우리 식의 세계지도를 보고 서양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아마도 보이지 않게 쓴 웃음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같은 세계지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평면지도의 경우일 뿐이다. 둥근 지구본의 세계지도에는 그런 변형이 있을 수 없다. 평면의 지도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구본은 그렇지 않다. 지구본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이 저마다 지구의 중심임을 지구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제 하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날 보여준 일본인들의 군국

주의와 국수주의에 지금까지도 치를 떨곤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국수주의도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원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대개 그렇고, 외침에 시달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또 대부분 그렇다지만 외국인에 대한 우리들의 배타적인 감정과 민족적 우월감은 조금 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 있다. 많은 예를 들 것도 없다. 화교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상황은 명백하다.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화교자본이 생겨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위에서 화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어디에나 화교 학교들이 있었고 화교들이 경영하는 진짜 중국집들이 저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모습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도 2만여명의 화교들이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게 되어버렸다.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화교들이 유독 이 땅에서만 번영을 누리지 못한 데에는 토지소유권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동화하려는 노력을 덜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거부해버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지어는 신체적으로까지 한국인들에게 받는 차별대우와 학대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엘리트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만 경제사정이 우리만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일들이 이 땅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민족감정, 그런 우월감은 비열하기까지 한 것이다.

더구나 일본인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대우나 미국인들의 인종차별적 언행에는 한껏 목소리를 높여 항의를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비단 국내에서만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 혹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지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감정으로 툭툭 뭉쳐서 현지인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한 나머지 '어글리 코리아' 이란 손가락질을 받곤 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투철한 민족정신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민족주의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자존을 침해받지 않을 만큼 남들의 명예 또한 존중해줄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평면지도를 보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둥근 지구본을 보는 가치관으로 우리와 세계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 20세기에서는 마지막이 될 이번 광복절에는 '흠 다시 만져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전통적인 민족감정에 쪼이고 뒤틀린 구석은 없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고원정<작가>

조선일보 : 1999/09/03(금)

### [양필승교수] "화교는 국내 소수민족 권리 좀 찾아줍시다"

"화교는 우리나라 안의 유일한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을 박대하면서 우리 해외동포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되지요."

건국대 양필승(42·사학과) 교수는 '차이나타운' 건설 주창자이다. 그는 해외 화교자본 유치 를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 공 동위원장이자. 그는 오는 10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세계 화상대회' 에서 한국 차이나타운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제발표 를 할 계획이다.

국내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화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나라 라가 비로소 국제 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양 교수가 화교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무렵이 었다.

"어느날 나이 많은 화교 한 분이 연구실에 찾아와 '한국의 화교는 다 망 했다'며 저더러 차 이나타운 건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화교를 '인간'과 '국민'으로서 대접하 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 니다."

화교들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가질 수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외국인으로 5년마다 비자갱신을 해야 했다. 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60년대 20만명에 달했 던 화교는 최근 1만7000여명으로 줄 었다.

양 교수는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세계 화교자본의 양대 축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테이핑 추안 회장과 홍콩상공회의소 청여우칭(진유 경·67) 회장을 만났다. 이들은 서울 차 이나타운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 다고 한다.

양 교수는 서울시에 차이나타운 부지 선정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독섬지역 8만여평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양 교수는 "주거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 리 금융과 부동산, 유통, 첨단 정보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21세기형 차이나타운' 제안에 해 외 화교자본이 관 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교들은 양 교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다.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10여년전 한국을 떠난 화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 같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 함께 울 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한국 국민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교수는 "화교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화교의 재산권과 참 정권에 대한 제한 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화교와 한민족이 함께 살아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장일현기자 : ihjang@chosun.com)

동아일보 : 1999/09/08(수)

### 정부, 장기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추진

정부는 제3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02년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주기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김기재(金紀載)행정자치부장은 8일 "가칭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 가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선거권 부여대상 외국인은 만 20세 이상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대만 화교 1만6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 투개표, 참관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진영기자> ecollee@donga.com

조선일보 : 1999/09/09(목)

## [화교 반응] "참정권 준다고 차별 끝나나요"

『저희 후손들만은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중구 중국음식점 「동보성」 사장 이충현(42)씨는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준다는 소식에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너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출생지는 충남 당진. 이씨의 8형제 가운데 큰 형과 이씨를 뺀 6명이 미국 일본 대만 등지로 떠났다. 이씨는 국내 대학들이 입학을 거부하는 바람에 70년대 말 일본에서 대학(경영학)을 나와야 했다. 화교 고등학교가 정식 고교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학교 인정을 막고 있다는 게 화교들의 주장이다. 일본 대만 등지에서 유학하고 한국에서 취직한 그의 친구들은 5년을 못 견디고 외국으로 떠났다. 「장기거주 외국인」인 친구들은 늘 진급 심사에서 누락됐다. 88년 중국음식점을 시작한 그는 「아직 화교를 「짱꼴라」라며 무시하는 손님들을 심심찮게 만난다」고 했다. 이씨는 「형제들이 외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며 「대부분의 화교는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층」이라고 말했다. 화교 차별정책으로 해방 초기 10만여명이던 화교는 현재 1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공동, 인천 선린동 등에 번성했던 「차이나타운」은 모두 사라졌다. 한 화교는 「한국 정부가 재개발한다며 은행에 돈을 공탁해 놓고는 모두 나가라고 했다」며 「그 돈으로 다시 음식점을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우심화(44) 교수는 「화교들은 백화점 신용카드조차 발급 받을 수 없다」며 「권회로씨가 일본에서 민족차별을 받았다고 하지만, 화교들은 한국에서 더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화교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국내에 체류하는 소수민족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서 온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화교들은 주택과 상가를 포함, 200평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 이 제한은 정부가 IMF 이후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자유화하면서 비로소 사라졌다. 화교들은 음식점 이외에 무역, 임대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90년대 이전에는 법무부에서 2년마다 체류비자를 재발급 받았다. 재발급 기간은 최근 5년으로 바뀌었다. 참정권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성화교협회장 지건번 회장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화교들중 상당수는 화폐개혁, 물가양등기를 거치면서 파산했다」며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사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군대에 가지 않을 뿐 법대로 세금 내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우리 화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1999/09/13(월)

## [이슈추적]국내에 사는 외국인

일본에서 한민족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권회로(權鶴老·71)씨의 귀국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 ◆전체 외국인의 97%

100년 넘게 한국 땅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차별대우 속에 말없이 살아가는 화교(華僑)들. 그들이야말로 한국 속의 ‘권회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8월31일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국내거주 외국인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20만9000명을 포함해 179개국 36만8184명. 장기체류자 15만9184명 중 거주자격이 주어진 외국인은 2만2642명(141개국)이며 이 가운데 화교는 2만1983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 ▼화교의 역사▼

1880년대 일본이 한반도를 공략하고 나서자 인접국으로서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을 한반도로 이주시킨 게 계기였다. 이들은 서울 인천 부산 원산 등지에 ‘화상조계(華商租界)’를 형성, 한국에 등지를 틀었다. 화교인구는 해방직후 중국 내전을 피해 산둥지역에서 대거 피란오면서 한때 10만명을 넘기도 했고 인천 선린동, 서울 소공동 등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그러나 6·25전쟁과 두 차례 화폐개혁을 거치며 화교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67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화교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하면서 ‘차이나타운’까지 모습을 감춰버렸다.

### ◆곳곳 보이지 않는 차별

### ▼화교가 죄인가▼

한중(韓中)수교후 화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불이익은 상당히 줄었다. 우선 지난해 7월 외국인 토지소유제한이 해제돼 화교들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올 2월에는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채취대상이 17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거주지 등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준다는 방침도 마련됐고 서울시에서는 독섬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가 됐다. 의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는 여전히 이들에게 냉소적이다. 한국인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이유없는 우월감’은 우리 스스로도 참 헤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이지 않는 차별’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화교들은 “대출 때는 가장 비싼 금리를, 이동전화개설 때는 추가보증금을 물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 지역 화교협회의 한 직원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취직하더라도 승진은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 ▼핍박의 생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화교 한성호(韓成昊·73)씨는 50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한씨는 '살아 있는 화교 역사' 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화교' 라는 이유로 수난을 당해왔다.

#### ◆"참정권 주면 뭐하나"

한씨는 93년 아들 입표(入彪·45)씨를 한국에 귀화시켰다. 주위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었다. 외국인인 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와 각종 세금 등을 내려니 재정이 파탄직전에 이르렀던 것. 그러나 귀화도 쉽지 않았다. 4급 이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보증인 2명이 필요했기 때문. 한씨는 70년대와 90년대 초 두차례 신문 및 잡지사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외국인에게 허용돼 있지 않아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고 이 한국인 때문에 재산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한씨는 손자들마저 학교에서 '중국X' 이란 소리를 들을 땐 가슴 아프다고 한다. 한씨는 "참정권을 주면 뭐하나" 며 "그보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대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고 말했다.

#### ◆차이나타운 설립 필요

##### ▼화교의 숙원▼

한씨처럼 대부분 화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이웃' 으로 대접받는 것. 서울 마포구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는 "사람들이 우리를 '장계' 라고 빈정대는 것에 이골이 났다" 며 "왜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고 반문했다. 건국대 사학과 양필승 교수는 "중국과 동남아경제가 급속도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화교의 경제력을 잘 활용하면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그 한가지 방안으로 국내에 '21세기형 차이나타운' 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의 배타적 외국인관(觀)을 일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위상을 아시아의 한 구심으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이완배기자〉 corekim@donga.com

국민일보 : 1999.09.17,

### [데스크칼럼-안병선] 차이나타운을 생각하며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레라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한 중국식당이 있다. 이 식당은 음식맛이 좋아 늘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요리가 우리 입맛에 맞아 한국 동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러나 한국 동포들은 이 식당에 가기를 주저한다. 굳이 간다면 의도적인 불친절을 각오하든지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이 식당 주인이 '한국인 사절' 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70년대 초까지 서울 소공동에서 꽤 큰 중국식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당시 식당은 잘됐지만 화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차별에 견딜 수가 없었다. 고생해서 번 돈으로 엄청난 세

금을 내기에 바빴으며 어렵게 사모은 땅과 건물도 외국인 부동산소유권 제한 조치로 헐값에 팔아 넘겨야 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그는 한국인들에게 '장계' 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과 한국 사람이라면 몸서리를 친다는 것이다.

그 식당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몇년 전 그곳에서 연수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자책감과 호기심이 함께 발동해서 푸대접을 각오하고 한번 가 보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그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싶었다. 어느날 저녁 우리 한국인 손님 일행은 작심하고 그 식당으로 향했다. 얼마를 기다린 끝에 구석진 곳에 자리는 하나 얻을 수 있었지만 스페니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식당 주인부부와 한마디도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근처에는 한번도 오지 않았다. 어쩌다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면 금방 표정이 굳어졌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서울 연희동 근처에 자생적으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도 한·중 우호를 위해 인천 송도신도시와 서울 특심 등지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때 미국에서 만난 중국식당 주인을 다시 생각한다. 그는 화교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얼마나 차별대우가 뼈에 사무쳤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한맺힌 감정의 응어리를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을까.

어찌 그들 뿐이겠는가. 해방 직후 10만여명에 달했던 화교들이 차별대우를 피해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주하고 지금은 2만1천여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한국을 떠난 화교 중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을 미워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화교들은 세계의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지역의 상권을 휘어잡으며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생활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그런 화교들도 살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면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인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제한이 완화되고 거주지 등록기간도 길어지는 등 법적 제도적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화교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그들은 여전히 '장계' 로 남아 있다. 한국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중국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중국인들을 우습게 여긴다. 그 '이유없는 우월감' 은 생활 속에서 갖가지 차별대우로 이어진다. 중국인들은 이점을 가장 참을 수 없어 한다.

"한국을 다녀온 중국인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모멸감' 입니다. 길거리 상점 식당 어디에서나 한국인들은 중국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멸시하는 태도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관광을 갈 정도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에 관광을 갈 이유가 없지요"

최근 중국 취재 도중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장의 지적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찌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은 중국인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어느 나라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와 원초적 인종차별은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오늘날 지구촌 인류의 행동규범은 국제화 세계화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자기들끼리만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 동포들도 현재 세계 1백40여개국에 5백50여만명이 나가 산다. 특히 우리가 이유없는

우월감을 가지는 중국에도 우리 동포 2백여만명이 살고 있고 최근 귀국한 권희로씨가 살던 일본에도 65만여명이 거주한다.

우리는 우리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각종 규제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인가.

우리가 이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차별대우를 면치 못한다. 당연히 우리 동포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별대우나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생활과학부장

동아일보 : 1999/09/18(토)

### [기고]왕계문/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한국 거주 화교(華僑)들은 반세기 동안 대부분 음식점을 경영하며 이 땅에 자장면 문화를 퍼뜨렸다. 화교들은 자장면과 짬뽕을 통해 한국인들과 깊은 우정을 쌓으며 단출했던 한국인의 식생활에 혁명을 일으켜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자부한다.

물론 서운한 것으로 따지자면 화교들도 참으로 할말이 많다. 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타적 감정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심한 편이다. 화교들은 차별정책에 견디다 못해 정든 한국땅을 등지고 미국 캐나다 등지로 떠나기 시작했다.

70년대 초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에 돈 많은 화교들로 번창하던 서울 북창동 플라자 호텔 뒤 차이나타운이 사라졌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못마땅하게 여긴 집권자들은 이곳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 재개발을 부담할 재정능력이 없는 화교들은 대만 정부의 방관 속에 눈물을 뿌리며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로써 차이나타운은 한국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추었다. 세계 각국에 가보면 번성하는 차이나타운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그 나라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세계 어느나라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한국이 그만큼 배타적인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인천 선린동과 서울 독섬 등지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곳보다는 화교들이 이미 많이 자리를 잡은 서울 연희동 화교학교 부근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국 화교들은 경제력이 없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차이나타운 건설이 성공하기 어렵다. 또 산업자원부가 인가한 한국화교경제인 협회는 비경제인들이 구성된 조직으로 화교경제인 대표성이 없다.

31년간 옥고를 치른 권희로씨의 노쇠한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모습은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상징이다. 화교들은 권희로씨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화교들도 한국에서 견디기 어려운 차별을 받으며 속으로 슬한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권희로씨가 없었을 뿐이다.

다행히 근년에 이르러 화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불이익이 많이 줄었다.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이 해제돼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거주지 등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여기서 나아가 간절한 소망은 화교들에게 거주지 등록의무를 없애고 시민권을 부여해 경제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화교들은 아직도 높은 은행대출금리, 이동전화가입불가, 회사 취직 차별 등을 받고 있다. 공무원 임용의 문호를 화교들에게도

개방해 중국 대만 관계 업무에서 활용하면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화교들의 수난은 한중 수교, 한 대만 단교로 더욱 깊어졌다. 중국정부는 한국 화교들의 권익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대만 고립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대만 정부(중화민국)는 단교후 화교 권익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어서 한국화교의 권익 보호에 무기력하다. 대만 여권으로는 세계 여행에 제약이 많아 한국 화교는 이래저래 양안(兩岸) 관계의 최대 피해자이다.

나는 5세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와 한국에서 자라고 사업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다. 나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한다.

왕계문(한화천지 이사·화교)

동아일보 : 1999/10/11(월)

### [문화가 흐르는 한자]華僑(화교)

‘바닷물이 있는 곳에는 華僑가 있다.’ 중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과연 華僑는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무려 3000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天災(천재)와 人災(인재)에 따른 수 차례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 그때마다 생존을 위해 국내와 해외로 인구의 대량이동이 있었는데 대체로 바다를 끼고 있는 푸젠(福建) 광둥(廣東) 산둥(山東)성 등지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해외로 진출하였다. 이 때문에 華僑라면 이 몇 개 성의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서해 건너 山東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까웠던 탓이다.

중국에서 華僑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멀리 당나라 때부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일대에 진출했다고 한다. 그러다 19세기 초 阿片戰爭(아편전쟁)으로 혼란했던 데다 서구열강의 팽창주의로 대량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華僑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당시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다. 마이 주 쓰(賣豬仔·매저자·인신매매된 일종의 준노예)가 대부분으로 쿠리(苦力·막노동자)라고 불렸다.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건설 당시의 활약은 너무도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1882년(고종19년) 壬午軍亂(임오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우창칭(吳長慶) 휘하의 군대를 따라 40여명의 상인이 입국한 것이 嚆矢(효시)다. 같은 해 청나라와 通商條約(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華僑유입의 길을 터놓게 된다. 당시 이미 서울과 인천에 약 300명 정도의 華僑가 있었는데 상업을 천시했던 풍조에 힘입어 급속도로 상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과연 그들은 상업에 뛰어나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華僑배척운동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차별정책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10만명을 넘어섰던 수가 지금은 2만2000명 정도로 줄었다. 다들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 혼한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華僑를 ‘비단장수 왕서방’ 쫓으므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그들의 경제력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鄭錫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chungsw@mail.hanyang.ac.kr

### [기고]양필승/中華경제권의 용틀임

“그린백(미국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中華)경제권의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자.”

이달 초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5차 세계화상(華商)대회에서 한 참석자의 제안에 모든 참석자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중화 경제권이 본격적으로 용틀임을 시작한 것일까.

비록 돌발적인 제안이었지만 아시아 외환위기의 피해자인 화교들이 경기회복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지니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시에 중화경제권의 결속력 강화를 기대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신하는 중화권 자체의 화폐가 당장 탄생하기는 어렵지만 화상들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중화경제권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의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화상대회에서도 화교경제권의 전자상거래가 커다란 관심거리였다.

호주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는 문화와 비즈니스의 결합을 추구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화교들은 공통의 언어 관습 역사 등을 통해 문화적 공통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구축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91년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전 총리의 주도로 격년으로 전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도 그같은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문화적 공감대를 활용한 화교 네트워크는 그동안 지리적인 장벽과 다양한 중국어의 방언 때문에 의사소통의 한계를 맞보았다. 정보통신혁명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인터넷이 리얼 타임의 정보 및 중국어 문자 서비스를 세계 각지의 화상들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본교류나 교역이 중화경제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 혁명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본과 인재 중 상당 부분이 중화경제권에 속해 있다.

중화경제권은 어쩌면 단일 화폐보다도 한층 강력한 매개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자체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한국도 한자문화권의 일원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중화경제권과의 접촉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어 한국어 또는 가능하다면 영어까지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2001년 세계화상대회는 중국의 난징(南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도 200여명의 대륙 사람들이 참석해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중국이 파견한 셈이 됐다.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출범한 이후 20여년 동안 자본이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해외 화상들로부터 대륙을 향해 진입했다면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대륙의 자본이 해외의 화상들에게 투입되고 있다. 중화경제권의 중심축이 더 이상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상하이(上海)나 베이징(北京)으로 바뀌었다. 아시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대륙자본의 해외진출은 확실한 대세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중국 대륙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면 대륙 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삼국에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때다.

양필승<건국대학교수·중국사>

### [뉴스 레이더] 한국의 화교들, 냉대-차별 속 고사위기

☞ 인천화교협회의 치기헌(65)씨는 지난 설을 친구들과 어울려 마작을 하며 보냈다. 1948년 12살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서울 등지에서 중국식당 요리사로 한 평생을 보낸 그지만 가족들이 모두 대만, 일본 등지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34, 31살이 된 두 아들은 모두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딸은 한국인 재일교포와 결혼해 일본에 살고 있다. 부인도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대만에 들어갔고 처가도 모두 대만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한국에서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까 아예 대만으로 갔죠. 저야 지금 이 나이에 대만에 가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냥 혼자서 살아요. 하지만 쓸쓸해요.” 치씨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치씨가 살고 있는 인천 중구 선린동 4,5통 일대는 한때 차이나타운으로 번성했던 곳. 19세기말 개항당시 청국지계가 설정돼 중국인이 집단 거주하던 지역으로 화교 이민사의 첫 장을 열었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영락없는 대도시의 슬럼가로 변해버렸다. 곳곳에 산재한 중국식 목-석조 가옥 폐가가 울썸년스러웠다. 폐가 중에는 10년째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곳도 있다. 깨진 유리창, 칠이 벗겨진 나무대 문에 이끼와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건물 외벽... 한때 2000명이나 거주했던 중국인은 이제 170명 남짓 남았을 뿐이다. 그나마도 대만이나 한국 내 외지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상주 인구는 100명을 헤아릴 정도이다. “풍미집 등 4곳의 중국식당이 있어 지금도 가끔 중국 요리를 즐기는 미식가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밤에는 폐가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괴기스럽기까지 하다”고 인천 중구청의 최기수 도시개발과장은 전했다.

그런 형편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설날이면 울려 퍼졌던 폭죽소리가 들릴 리도 만무하다. 인천 화교협회 회의실로 쓰이는 청나라 영사관 건물 1동과 남은 중국식 가옥들만이 이곳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내 화교들의 고향이라고 할 인천 화교촌의 이런 모습은 한국내 화교들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한국 정부의 냉대와 사회적 차별 속에 ‘영원한 이방인’ 화교들은 쇠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교 이민사는 올해로 약 110년을 헤아린다. 19세기말 개항과 함께 인천 선린동에는 청나라 조계가 설정됐고 청나라 사람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청요리라는 이름의 중국요리 집들은 1차 대전의 호황 속에 날로 번성해갔다고 한다.

그 이후 한국내 화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40년대말~1950년대 초. 중국 국공 내전을 피해 산둥성 지역의 중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한때 국내 화교 인구는 10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교들이 늘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교 정책은 점점 더 강화돼 화교들을 옥죄어갔다. 한국 정부 공식자료에조차 ‘1·3공화국 당시의 억압정책’이라고 표현돼 있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화교정책은 부동산 취득 제한, 거주자격 심사 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연이어졌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경찰서, 국세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각 구청 등이 만만한 화교들을 족쳤지요. 한국 사람들보다 두배 이상 뇌물을 바쳐야 했어요." 무역회사를 하는 50대 화교 L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PC통신 천리안 중국어동호회의 화교 Y씨(50)는 소공동 차이나 타운이 소멸된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0년대 소공동 차이나타운에서 건너 편 광화문 방면으로 건너가는 길을 서울시에서 아예 내주지 않았어요. 차 이나타운을 죽이겠다는 발상이었지요. 화교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 남대문 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한창 성장하던 70~80년대가 화교 정착의 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 취득 등 부의 축적 수단이 원천 봉쇄됐으니 어떻게 기반을 잡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이런 억압정책 속에 한국의 화교 들은 베트남화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화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희망을 잃은 화교 엘리트층들이 70~80년대 집중적으로 미국, 대만 등으로 탈출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탈출은 국내 화교들의 재기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잡힌 국내 거주 화교 인구는 2만2000명. 하지만 대만 등으로 생활기반을 옮긴 사람이 많아 1만50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만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화교 주더화(주덕화·44)씨에 따르면 연락처가 있는 자신의 한성화교중학교 동창생 156명중 한국 내에 남아 있는 사람은 72명으로 채 반이 안된다고 한다. 46명이 대만 으로 귀국했고, 미국에 28명이 이민을 갔다. 지금도 해마다 국내 화교학교 졸업생중 20~35%는 대만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국내 화교들은 지난 수년간 화교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는 데 대해 수긍한다. 외국인 등록 갱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귀화 조건도 많이 풀렸다고 한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전후해서 화교 자본 유치론이 일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차이나타운 복원 계획을 세우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한창 사회에 진출하는 20~30대의 화교 3·4세대들이 느끼는 사회적 벽은 여전한다는 게 화교들의 푸념이다.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다 대 만계 무역회사로 자리를 옮긴 왕모(29·여)씨는 "옛날처럼 '장팔라' '짱깨' 같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사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국사회의 두터운 벽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영등포화교협회의 한 관계자는 "IMF 직후 MMF 같은 고금리 예금을 화교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한 예"라면서 "직장생활, 금융거래 등에서 사회적 차별은 여전한"고 꼬집었다.

물론 모든 화교들이 이렇게 한국정부를 원망하며 화교사회의 고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들어 화교 내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아버지 세대에서는 한국사회에 마음의 문을 열어닫고 지냈 습니다. 차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인 셈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라면 화교 자신이 한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우심화교수(43)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화교 기업인은 "대기업에 들어간 화교 3,4세대들이 쉽게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화교학교의 교육이 부실했고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화교 학교를 주말학교 정도로 운용하고 화교 3,4세들을 과감하게 한국학교에 보

내야 한다"는 과 격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90년대 들어 귀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서도 잘 나타난 다. 미국 라디오 프리 아시아 방송의 한국 특파원을 지내고 있는 류춘형(유순항·47)씨는 "옛날에는 귀화가 화교 사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했고 지금도 노인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착에 필요 하다면 귀화도 할 수 있다는 풍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 부에 따르면 80년대에 매년 10여명 정도였던 화교 출신 귀화자는 90년 34 명, 94~95년 각70명, 96년 110명, 97년 150명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리안 중국어동호회의 Y씨는 이런 흐름에 대해 착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귀화한 사람들도 나이 들면 후회할 겁니다. 제일 한국인들이 귀화하 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는 한국정부와 화교들과 윈-윈(Win-Win)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늘어나는 중국 관광, 화교 자본 유 치에 국내 화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교가 부자가 된다고 부동산 들고 다른 나라로 갑니까? 결국 화교의 부는 한국의 부 아닙니까?"

한국 화교의 분포 전국에 2만2000명...산동성 출신이 95%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 인구는 모두 2만2000명.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한성화교협회와 영등포화교 협회가 관할하는 서울 지역이다.

강북과 강남을 각각 관할하는 이 두 협회에는 각각 8000명, 1800명의 화교가 등록돼 있다. 물론 대만에서 취업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어 화교협회 자체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가 각각 3000명, 1200명 전후이고 화 교의 본산지인 인천은 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교들은 주로 화교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데 서울의 연희동 일대,부산의 초량 부 근, 인천의 선린동 등이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로 꼽힌다.

국내 거주 화교들의 출신지는 대부분 산동성. 공식 통계중 하나가 한 성화교중학교 학생들의 출신 지역 분포인데 총 1016명의 재학생중 946명 이 산동성 출신. 하북 출신이 32명, 강소성 출신이 8명, 요녕성 출신이 7명으로 돼있다.

대만 국적이 대부분인 화교들은 각 지역 화교협회에 호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신세대 화교 위엔사오메이양 "한국선 아르바이트도 못해"...정체성 문제로 갈등 화교중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선 학생들은 장래를 미리 결정해 야 한다. 대학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대만 대학으로 갈 지, 한국 대학으로 갈지를 미리 결정하고 반을 가르 게 된다고 한다. 지난 해 대만 화교대학에 입학한 위엔사오메이양(원효미·19)은 "대만에 정착 하기 위해 대만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위엔양은 "화교 신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중국식당이나 하며 사는 것을 싫어 한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신문방송 분야가 대학생 들에게 인기라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화교로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주류 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형편. 화교 3세인 원양으로부터 젊은 신세대 화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다.

- 왜 대만행을 택했나? "한국 사회에서 취직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하다 못해 고교 시절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았다. 가져갈 주민등록등본도 없고 외국인이니 까 신체검사받고 오라는 곳도 있었다."

- 요즘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화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

고 피부로 나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화교 3,4세들의 사회 진출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 대만으로 진출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 “같이 졸업한 동기생 150여명중 60명이 대만으로 진학했다. 대부분 대만에 정착하게 된다.”
  -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가? “신문방송학이 가장 인기가 높다. 그쪽을 전공하고 싶다.”
  - 대만으로 돌아가면 쉽게 적응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당장 고추장과 김치 맛이 생각났다. 화교 3,4세들은 중국말조차 한국화돼 있다고 할 만큼 한국화돼 있다. 이를테면 ‘가자’는 말은 중국어로 저우바(주파)인데 ‘저우(주)’에 ‘하자’는 말을 붙여 ‘저우자’로 발음한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대만에서도 우리를 외국인 취급한다. 아이덴티티에 대해 갈등이 적지 않다.”
  -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떤가? “그들도 귀화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많다. 요즘은 필요하면 귀화하겠는 사람도 있다.”
- ( 인천=최유식주간부기자 : finder@chosun.com )

한국일보 2000/05/05(금)

### [일본]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 폐기될듯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선거권)을 부여하는 일본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도쿄(東京)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공명당과 자유당이 공동제출한 이 법안의 폐기 전망은 법안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민당이 끝내 당내 의견 조정에 실패한 때문이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강력한 요청을 고려, 중의원 정치윤리·선거법 개정 특위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당내 의사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6월25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불러서는 안된다는 내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일단 특위에 상정된 후 6월2일께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동시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동아일보 : 2000/06/30(금)

### [이슈추적]한반도 ‘華僑의 봄’ 오는가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노동당총비서가 평양시에 거주하는 화교(華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주석의 동상 건립과 영상작품의 보존사업에 힘쓴 것을 치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이 보도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한반도의 화교들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 살든 그 나라의 상권을 주름잡고야 마는 화교들에게 한반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불모지’다. 그 점에서는 남북한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서도 화교가 ‘뜨고’ 있다. 남쪽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화교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는 등 지위가 향상되고, 북쪽에서도 90년대 들어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보따리 무역을 하는 화교들의 역할이 급격히 커진 것. 최근 남쪽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60년대 이후 사라진 ‘차이나타운’이 다시 건설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화교경제인협회와 함께 송도 매립지에 10만~20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기로 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중국시장을 겨냥해 화교자본을 유치, 상암동 매립지에 수만평 규모의 ‘한중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들에 대한 규제도 몇 년새 많이 풀렸다. 98년7월 정부는 외국인들도 제한없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토지관리법’을 고쳤다. 화교들에게 ‘생명수’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화교들은 정부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조치’(67년)에 따라 그동안 200평 이상의 주택과 50평 이상의 점포를 소유할 수 없었다. 70,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한국인들이 ‘떼돈’을 벌 때도 화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법적 지위도 달라졌다. 3년에 불과했던 비자 갱신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최근엔 무기한 체류권(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72년 3만2989명을 고비로 매년 줄던 국내 화교인구도 최근 2만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말 법무부에 등록된 화교는 모두 2만2043명. 앞으로 화교 인구가 되레 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화교의 위상에 관한 한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은 60년대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북한내 화교들의 중국 방문을 연간 1회로 제한했다. 주로 보따리 무역을 하던 화교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한 셈이다. 대신 북한 인민과 마찬가지로 협동농장과 공장에 화교들을 편입시켰다. 63년 화교학교에 조선어 사용명령이 내려졌고 64년엔 평양거주 화교들이 발간하던 유일한 잡지 ‘화신’도 폐간됐다. 이에 따라 58년 1만4451명에 달하던 화교 인구는 급격히 줄었다. 상당수가 중국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북한 통계에 따르면 90년 화교인구는 8000여명. 30여년 사이에 40% 이상 줄어든 셈이다.

북한의 화교들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부터. 이들이 중국에 가 식량 옷가지 비누 치약 신발 등 생필품을 구해오자 북한은 중국 방문횟수의 제한 조치를 사실상 풀었다. 대중국 관문인 신의주의 상권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최근 북한 방문자들의 전언.

현재 북한의 화교인구는 9000~1만명선. 9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화교자본 문제에 밝은 양필승(梁必承) 건국대교수는 “최근 북한이 중국의 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협조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내 화교의 지위도 크게 향상됐다”며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중국 장쩌민(江澤民)주석의 회담 성사에도 이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 각지의 ‘화상(華商) 파워’는 한반도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 전 세계 화교인구는 90개국 5700여만명. 연간 소득도 4500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화상들이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아시아 1000대 기업 가운데 517개가 화상 소유다.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면 동남아 경제는 붕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98년5월 인도네시아 화교들의 탈출러시가 이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기도 했다. <하종대기자>

### 조선일보 사설(9월 15일자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에 대한 반론

김봉우 연구소 소장

아랫 글은 99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다. 이 땅에 와서 살고있는 외국인에게 무조건 규제 일변도의 억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설은 여러면에서 틀린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이 틀렸는지를 살펴보고 고치는 것은 이 땅에 살고있는 사람의 의무이다.

웬만한 나라, 웬만한 대도시에는 '차이나 타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있었다. 인천 선린동과 서울 소공동에 있던 차이나 타운은 중·노년층에게는 추억의 명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우리 민족의 배타적 차별 때문에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60년대 이후 차이나 타운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해방직 후에는 10만여명에 이르렀던 국내거주 화교 수가 지금은 2만 1천여명으로 50여년 사이 5분의 1로 감소했다.

중국에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우리 동포 200여만명이 살고 있다. 길림성에는 '조선족 자치주'도 있다. 이곳에서 우리 동포들은 우리 말을 사용하고 고유의 풍습을 지키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도 있다. 우리의 경우와 대비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내거주 화교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차별정책,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성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체해선 안되겠다. 그것은 지구촌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취할 바가 아니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가 화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서울 연희동에 차이나 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조짐과 함께, 인천 송도 신도시와 서울 독섬 등지에 '21세기형 차이나 타운' 건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해외의 화교자본을 국내화교들이 유치해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각종사업을 벌이게 되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더 많이 폐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이들의 정규학교 설립도 가능토록 터주어야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에서 세금을 물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가 곳곳에서 상존하고 있다. 당국은 화교학교에 대해 '각종 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게 완화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정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으면 한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인종차별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반론]

1. 이 사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와 한국에 있는 차이나 타운 형성의 역사적 차이를 모르고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전에 한국인들은 일제의 억압을 피하여 또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밀려서 강제로 만주땅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일제와 중국군벌, 마적, 중국인 지주들의 잘못할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면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고 일제와 싸워 중국을 해방시킨 제1의 공로자라는 점이다. 만주벌판에 일제와 싸운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국인 부대의 용감성은 항상 중국인 부대의 선두에서 일제를 쳐부수는 역할을 맡게 했다. 숫자도 많아서 만주지역에서 싸운 항일군의 절반이 한국인이었다.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변지역 점령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땅도 넓고 소수민족이 많지만 한국인처럼 중국의 발전과 해방에 큰 공로를 세운 민족은 없다. 바로 이런 엄청난 공적 때문에 조선족자치주가 만들어 진 것이다. 중국인의 너그러움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의 피의 항전의 소산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에 사는 중국인은 그냥 개인적으로 돈벌러 들어온 것이다. 한국을 위하여 온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하여 특별히 생명을 바친 것도 아니다. 그냥 외국인으로서 온 것이다. 그렇다고 팔세하자는 말은 아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면 될 것이다.

2. 이 사설은 우리민족의 배타성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없어졌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을 그대로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겨레가 일본인에게도 배타적으로 대한일이 없는데 해방이후에 왜 중국인에게 갑자기 배타적이 되었는지 원인도 과정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배타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유도 없이 왜 갑자기 중국사람만 미워하느냐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온 원인은 한국정부의 지나친 반공정책이 화교를 차별하고 감시해 온데 있을 것이다. 한국땅에 들어온 중국인은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 본토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국본토는 49년 이후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한국 땅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반공정권이 들어섰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가 되어 한국정부의 공적이 되었다. 모든 것을 반공으로 재단하던 한국정부는 중국화교들의 고향이 본토인지라 돈을 벌면 혹시 중국 본토에 보내서 공산정권을 돕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화교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냄새가 퍼질까 염려스러워 화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본토와 완전히 단절되도록 만들었다. 감시는 심하고 자기 고향하고 연락이라도 했다가는 빨갱이로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할 형편이고 매일 반공필기대회에 나다녀야 하니 무슨 재미로 한국에 살겠는가. 화교가 한국을 떠난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또 있다. 완전한 통제상태에서 중국인의 유입은 단절되고 자기 자식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도록 하다보니 한국인 싸구려 인력을 고용하여 주방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연히 중국집의 기술이 한국인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전국에서 중국집을 경영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그때 기술을 배운 한국인이 지금은 주인이 되어 다시 한국인에게 기술전수를 시키면서 한국식 중국음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에 대하여 친화감이 강하다. 한번도 미워한 일이 없다.

3. 이 사설은 한국의 화교정책과 미국, 일본의 인종차별 정책을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한국의 화교정책은 민족차별 정책이 아니라 반공을 위한 통제가 그 본질이다. 지나친 통제가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이상으로 한국인 자신들도 통제 당해 왔다. 그 통제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서적 물리적 장벽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흑인문제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잘 있는 흑인을 사냥질해서 끌고 와 노예로 부려먹은 결과가 오늘의 흑백문제이다. 인디언 문제도 다르다. 그들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남의 땅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다. 풍토병에 걸리고 식량도 없을 때 인디언들이 도 와서 살려 주었는데 우수한 살인무기로 인디언 수천만을 학살하고 멸종시킨 것이다.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와서 죽이면서 부려먹고 아직도 각종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일교포도 마찬가지이다. 징용이니, 정신대니 강제로 끌고 가 노예상태로 부리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억지로 돌아오던 사람들은 거의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 그것이 제일 한국인 문제의 원인이다. 북해도에 있던 원주민 아이누족은 근대에 이르러 일본이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잔인하게 멸종시켜 버리고 극소수가 남아 역사의 잔인성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과 차이나타운과 미국의 인종차별과 재일교포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인종차별 문제는 그 역사적 연원이 다르다. 다른 것을 다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원인과 전개과정을 잘 알아야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다.

4. 우리겨레의 배타성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서 많다. 주로 외국인 여론조사를 통한 것이거나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무슨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자신을 멸종시키려고 들었던 일본사람들에게 아직도 욕 한마디 제대로 한일이 없다. 만약 그랬다가는 한국의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국수주의를 규탄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아무 이유없이 치마저고리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백명이 면도칼질을 당해도 한국인 누구하나 나섰다는 소식이 없다. 한국 교포들이 미국 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모를 아무리 당해도 나서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 없다. 한국 정부도 물론 나서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정부라면 어떻게 할까. 전쟁을 치르더라도 자국민들 보호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언론이 외국인 불편을 자국민의 생활보다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우리는 듣지 못했다. 한국 언론의 유난스런 외국 애호증이라고 보면 병일까. 한국이 미일에 버금가는 강대국이라면 한국 언론의 외국인 존중은 친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오랜 세월동안 엄청난 외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근대이후에는 멸종지경에 이른 경우도 많았다. 외국인은 특히 강대국 국민은 한국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역사적 조건은 한국인에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 심과 무서운 상전이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미일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다. 한국인의 권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혜택이 미일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국민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역사의 소산이다.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한 정서를 가진다면 그런 정서를 만들어 낸 역사적 요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적 요인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느니 아니니 하는, 역사적 흐름과 현실적 관계를 벗어난 비논리적 언쟁은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근대이후 한국사회는 외국에 대한 예속과 식민지배, 종속의 상태가 이어져 왔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도 이러한 역사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요즘와서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주로 반공정책에서 비롯된 통제의 불편함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반공, 안보통제정책과 민족차별과 배타성을 이제는 정확하게 가려서 보고 외국인에게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5. 중국은 오랜 세월이 걸쳐 주변민족을 점령하여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다민족국가이며 그 속에는 각이한 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한다면 당장 중국은 작은 문화단위의 소국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대한 다민족국가와 우리처럼 작은 단일민족 국가는 그 구성과 운영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연변자치주의 운영이 과연 아무런 차별이 없는 조선문화 존중 일변도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세밀한 관찰을 한 이후에 언급해야 할 문제이다. 연변땅은 중국의 주권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내부정책의 모든 결정권은 중국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 상태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논설을 쓴 사람의 주장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제약과 동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6. 근본적으로 한나라, 한민족의 문화적 독자성, 자주성은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한나라, 한민족이 남의 비위에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자신의 생존과 문화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이야기이며 자존의식이 원천적으로 결핍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것은 그 사회의 의식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식민 상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문화의 독자적 가치를 잘 의식하고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해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7. 각이한 민족단위의 문화는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것도 소중한 것이다. 서로간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참된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어느 한 문화를 기준으로 세계문화를 통제합시키려고 든다면 그 자체가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으며 한국언론은 그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앞장서서 날뛰고 있다.

8.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에게 잔인한 악행이나 차별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민족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된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의 차별 정책과 한국의 경우는 역사적 연원이 다르지만 경우가 달라도 인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악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외국인 노동력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수입하고 이용하려고 드는 정부나 경제계의 발상은 우선 그들에게 몇푼의 이익을 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우리민족이나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차별이 바로 이런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만든다. 미국 흑인노예 문제의 귀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짚어 보아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고용한다면 그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던 외국인에게 우리와 같은 임금과 권리 사회보장을 베풀어야 한다. 강대국 국민에게는 무한대의 권리를 주고 약소국 국민은 종부리 듯 하는 우리의 제국주의적 인간관은 바뀌어야 한다.

조선일보 : 2000/07/05(수)

## [차이나클럽] 슬픈 한국 화교

### ■ 오늘의 중국: 슬픈 한국 화교

#### □ 화교 토론회

건국대 사학과 양필승(梁必承) 교수의 글을 발췌, 소개합니다. 한국 화교사회를 조명한 글입니다. 양 교수는 국내 차이나타운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인입니다. 양 교수는 4일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화교(韓華)의 조상들은 대부분 중국 산둥(山東:산둥)성에서 건너왔다. 현재 대부분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즉 타이완에 있다. 전체적인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현재 약 2만명이 안된다.

화교는 정의부터 복잡하다. 중국정부는 화인(華人:ethnic Chinese), 화교(華僑:Chinese sojourners)를 나누고 있다. 전자는 부계의 조상이 중국민족으로서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집단을 지칭하며, 후자는 현지의 국적 대신 중국의 국적을 유지한 집단이다. 학계에서는 이 구분 외에 화예(華裔)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화예는 스스로 교민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화적으로만 자신들의 조상이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한화는 화인과 화교로만 구성되었으며 화예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화는 2만3282명이었고, 이중 실제 국내거주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산둥출신이 대부분

한화사회는 산둥(山東:산둥)성 출신이 압도적이다. 1983년 주한 타이완대사관 통계로 한화의 94.6%가 산둥 출신이다. 산둥 출신자가 많은 것은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화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20세기 상반기 산둥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 소농경제가 몰락위기에 처해 계절이민을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했기 때문이다.

한화의 절대다수가 산둥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제 화교사회에서 한화가 소외된 요인 중 하나이다. 국제 화교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광둥(廣東:광둥) 등 남부 출신 화교와 한화가 느끼는 언어상의 이질감은 마치 영어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도 같다.

한화들은 6.25 전쟁 중 200여명 이상이 참전하여 조상의 군대인 중공군을 상대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희생적인 전투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반공대열에 참여했다. 스스로 조상의 나라보다 한국을 자신의 국가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화사회의 구심점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타이완 국적을 계속 유지해나간다. 하지만 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함으로써 이들의 이념적 구심체였던 반공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상실된다.

1950년대 초~70년대 초 냉전체제 아래서 한국에서는 일제의 잔재인 한화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됐다. 외국인 신분으로 2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 강세 업종인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 정부의 외환규제와 창고봉쇄령으로 화상의 대외 무역 등 경제적 입지는 대폭 줄어들었다.

#### □ '중국집' 한국인이 장악

이제 한화의 직업선택은 매우 단순해졌다. 음식점만이 살길이 된 것이다. 현재 한성화교 학교의 학부모 중 50% 이상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의 이민 활성화 조류에 따라 한국 화교의 엑서더스(대탈출)가 시작돼 중국 음식점마저 한국인에게 영역을 빼앗기기 시작한다. 차별이 적고 경제활동이 보다 자유로운 미국 캐나다 등지로 화교들이 많이 빠져나감으로써 소위 '중국집' 대를 이을 젊은 화교 인력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통적으로 한화들이 장악해왔던 '중국집'마저 한국인이 장악해 들어갑니다.

최근 한국정부가 대화교정책에 다소나마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화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 상한의 폐지, 화교학교의 지위를 임의단체에서 각종학교로 승격,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등 이전의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한화의 위상제고는 한국사회가 현재 추구하는 세계화를 향한 진전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한국 화교들은 아직까지 외톨이 신세입니다. 대부분 국적은 타이완 국적이지만 한국과 타이완이 단교함에 따라 이들이 기댈 언덕이 모호해졌습니다. 한국인은 여전히 차별적 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중국은 같은 민족이지만 국적이 타이완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국교가 단절된 한국내 자국민을 보호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국 내 조선족에게 따뜻한 시선을 갖는다면 한화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닌다고 세계화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배타성을 버리고 진정 '세계인'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呂始東드림 sdyeo@chosun.com )

동아일보 : 2000/07/27(목)

## 印尼화교 14만여명 수십년만에 국적 취득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약 14만명이 수십년만에 무국적자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됐다고 안타라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26일 인도네시아정부에 등록된 중국인 무국적자 20만8820명중 14만570명이 최근 국적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연말까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자 가운데 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된 5천여명을 제외한 약 14만명에 대해서는 내부심사를 거쳐 국적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들 무국적 중국인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은 지난 60년대초 단행된 화교에 대한 국적취득요건 강화조치와 관료들의 잦은 횡포 등으로 인해 수십년간 국적을 갖지 못한 채 각종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왔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hadi@yonhapnews.co.kr

국민일보 : 2000.08.17 (목)

## [경기] 화교자본 유치·관광개발 위해 차이나타운 조성

경기도는 자본유치와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차이나타운과 화교의 거리 등을 조성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화교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나 체류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국내 출생, 영주거주자의 경우 현행법상 5년마다 사증을 갱신해야 하고 복잡한 자녀취학절차 등의 차별을 없애 내국인과 동등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화교인구는 모두 1450여명으로 이중 73%가 중국음식점이나 한의원, 한약재료상 등에 종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거주 화교들의 주거 또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나 화교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제도개선이나 시설 등이 유치될 경우 화교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최진광기자 cjkwang@kmib.co.kr

동아일보 : 2000/09/13(수)

## 외국인학교는 뭔가 다르다?

[교육]외국인학교는 뭔가 다르다?

서울 노원구 월계2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CCS)의 초등 1, 2학년 통합반 수학 교실. 학생은 모두 14명. 영어로 재잘거리던 학생들이 담임 교사인 마크 프로츠먼의 손뼉 소리에 귀를 쫓긋 세웠다. 교사는 답을 팔러 장에 가는 농부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며 덧셈 뺄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농부가 닭 5마리를 사서 트럭에 싣고 가고 있었어요. 이 옷집 농부를 만나 닭 2마리를 더 싣게 됐어요. 모두 몇 마리일까요.” “3마리요.” “6마리요.” 여기 저기서 틀린 대답이 나왔다. 윈스턴(7·한국명 유덕상)이 손가락으로 계산하더니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7마리예요.” 교사가 칭찬을 하자 옆 짝꿍이 ‘축하해’ 라며 윈스턴에게 악수를 청했다. “잘 들어봐요. 농부가 7마리의 닭을 싣고 농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가 덜커덩 하면서 3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교사는 답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먼저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칠판에 ‘5+2=7’ 같은 풀이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 각도기 대신 팔을 벌려 직각, 예각, 둔각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개념을 배우도록 유도했다. 놀이를 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았다.

89년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모두 120명이 공부하는 미니 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0~15명, 교사는 20명. 교육 시설은 수준급이다. 해외에 오래 살다 귀국했거나 시민권 영주권을 획득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입학자격=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정원의 20~3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할 방침을 밝힌뒤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CS

카운슬러 송유하씨는 “영어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입학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5년 이상 장기 해외거주자로 까다롭다.

정부는 초 중학교는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살며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했거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고교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교포 자녀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공무원 상사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 가운데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에게 입학자격을 줄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학교 재학생은 한국인이 대다수. 대부분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들로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국내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이들은 외국인학교를 선호하거나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외국인학교에 등록한다.

▽외국인학교 현황=국내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교이며 화교학교의 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22개 학교(영어사용 학교 12개교)만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미인가 임의단체에 머물고 있다. 수업료는 대부분 연 600만~1000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1000만원이 넘는 학교도 몇 곳 있다. 점심식사비 통학버스비 특별수업비 등은 별도.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1.8명.

▽교육과정=외국 교육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 학교와 교육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국제 크리스천학교(ICS)중 고교 과정은 성경 컴퓨터 드라마 영어 외국어 수학 음악 체육과학 사회 등을 가르치고 스포츠 모의유엔 신문읽기(NIE) 학생자치 밴드팀 등 과외활동을 한다.

필립 할리버튼 ICS교장은 “과목 수가 적지만 학생 수준에 맞게 심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필수 과목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1학기는 8월말이나 9월부터 시작한다. 초등 학교 과정은 입학시험이 없지만 중 고교 과정은 영어 수학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다.

▽진학=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교육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교육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학교는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받지만 국내에서 아직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인학교생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국내 고교생과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녀가 적당히 영어를 배우고 국내 중 고교나 대학에 진학하는 방편으로 외국인 학교를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학교 졸업자 대다수는 미국 등지로 진학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http://jeonju21.co.kr/pds/pds\_16.htm

동아일보 : 2000/09/21(목)

## [기자의눈]심규선/60만 제일교포의 당연한 요구

일본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일본의 식민지배 시대에 강제로 일본에 연행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지방참정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는데 반발하고 있는 자민당내의 반대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이다. 참정권을 외국인 모두에게가 아니라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영주외국인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일한국인과 북한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전쟁에 대한 보상과 지방참정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공방을 보며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지방참정권 부여와 전쟁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 분명하게 반성하고 사죄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식민지 시절 일본은 '내선일체' 라며 술한 한국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러고도 일본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잃었다고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했던 '악행' 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일본이 뭘 잘못했느냐' 는 우익들의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60만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왜 일본에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그 경위를 인정하면 해답은 저절로 나온다.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 요구는 결코 구걸이 아니다.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사민당은 20일 간부회의를 연 뒤 노나카 간사장의 제안을 다른 의미에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당론 통일이 안된다고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질책이었다. 심규선<도쿄특파원>ksshim@donga.com

국민일보 2000.11.03 (금)

## “한·일 함께 외국인 인권 보호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2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제8회 외국인등록법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뒤 '아시아 국가 인권과 화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일본 외등법 문제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선언에서 한·일 양국이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조약을 되새겨 외국인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기독교단체는 또한 한·일 양국이 유엔 인권규약과 인종차별 철폐조약,국제노동기구(ILO)의 이주노동자 최저 대우에 관한 조약 등 국제 인권법을 완전히 비준하고 올바른 외국인 고용허가를 위해 일본은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연수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금까지 한·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시아 내의 여러 기독교단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전후보상을 깨끗이 해결하길 촉구하며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기독교단

체는 이밖에 공동선언을 통해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과 한·일 역사와 현재의 만남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함과 아울러 '재일 한국·조선인 2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주 만나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규원기자 gwkim@kmib.co.kr

## 人道法論叢 10·11호, (91.07) 대한적십자사

### 在日 韓人의 日本地自體選舉 參與問題

鄭印燮(韓國放送通信大學 法學科 副教授)

#### <目 次>

1. 序
2. 外國人 選舉權에 관한 국제동향
3. 在日韓人의 選舉權 獲得運動
4. 結

#### 1. 序

社會 속에서 個人의 政治的 地位는 政治적 活動의 自由와 國家정책형성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의 程度에 달리게 된다. 政治活動의 自由는 이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表現의 自由, 集會 및 結社의 自由, 思想의 自由 등의 形態로도 논의될 수 있으나 民主社會에서 參政權의 1차적 표시는 選舉權·被選舉權임은 물론이다.1)

國家에서 행사되는 勸力의 正統성과 合법성을 保障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社會構成員의 同意이며 이 同意는 통상 선거권의 행사로서 表現된다. 이러한 내용은 한마디로 國民主權原理라고 요약된다. 근대國家의 탄생 이래 個人의 政治的 權利의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個人의 社會 속에서 어느 정도의 政治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느냐의 정도는 곧 그 社會의 民主化 水準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現代 人權思想의 발달은 內·外國人間의 區別을 극소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外國人에게도 內國民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國家는 순수하게 自國國民에게만 속하는 권리의 향유로 부터는 外國人을 排除시킬 수 있는 裁量權이 있으며, 특히 外國人의 선거 참여는 대표적인 排他항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히려 外國人의 政治 參與를 追放根據로 규정하고 있는 國家가 많다.2)

즉 外國人에 대한 內國民待遇 要請도 國家의 自己保存權에 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서유럽국가들 중심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外國人에게는 地方自治體 選舉權을 부여하는 추세가 근래 확산되고 있다. 地方自治體의 운영주체는 國民이라기 보다는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住民이며, 住民으로서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個人의 국적이 결정적인 중요성은 갖지 못한다는 측면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현재 在日韓人社會에서는 日本 地方自治體 選舉에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自身들과 같이 日本社會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아갈 사람들을 外國人이라 하여 自治體 운영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尙當치 못하므로 일정한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관하여는 在日韓人社會 자체 속에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기도 하나 1990년에는 선거권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되어 현재 사건이 日本法院에 繫留中이다. 이에 즈음하여 본고는 外國人 選舉權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고 在日韓人의 선거권 요구 운동을 평가하기로 한다.

## 2. 外國人 選舉權에 관한 國際動向

거의 모든 國際法 學者들은 外國人의 參政權 排除가 국제법이 禁하고 있는 자의적 차별에 속하지 아니하며, 국제법상 허용되는 合理的 區別로서 인정하여 왔다.3)

근대 국제법 발달 초기부터 外國人의 國內정치 干渉는 主權國家에게 해당자를 추방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수락되어 왔다.4)

물론 국가가 호의로써 外國人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극히 최근까지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나 발전은 미미하였다.5)

이 같은 입장은 현대의 각종 人權條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즉 內·外國人 平等待遇原則下에 각종 권리의 향유 주체를 '모든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도 참정권 부분에 이르러서는 例外없이 內國人 限定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國際人權規約(B規約) 제25조, 美洲人權規約 제23조, 유럽人權規約 제1추가의정서 제3조, 아프리카人權憲章 제13조가 그러하다.6)

따라서 오늘날 外國人에 대한 참정권 배제가 국제인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 결국 아직까지 外國人의 政治的 地位는 個別國家의 國內법에 맡겨져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7)

그러면 個別 國家가 스스로 外國人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예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자.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이 外國人의 선거권을 인정하였던 예가 있었으나 이는 자국의 특수사정을 반영하였던 과거의 예에 불과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70년대 후반부터 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外國人에게는 人權保護의 차원에서 選舉權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예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 서구국가에서는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웨덴: 1975년 北歐國 理事會(Nordic Council)는8) 3年以上 거주한 北歐國 出身 外國人에게는 地方選舉 (被)選舉權을 부여하라고 各加盟國에게 권고한 바 있다. 스웨덴은 이 권고를 즉각 수락함과 아울러 이를 北歐國 出身만이 아닌 모든 外國人에게 확대시키었다. 즉 1975년 12월의 法改正을 통하여 3年 以上 거주한 모든 外國人에게 (被)選舉權을 부여하였다.9)

1976년의 스웨덴 市郡議會 選舉는 外國人인 참여한 최초의 선거로서 218,000명의 外國人 유권자 중 약 13萬名이 선거에 실제 참여하였다. (투표율 59.9%)10)

1982년 선거에서는 89명의 外國人 當選者도 나왔다.

② 덴마크: 1977년 5월 18일의 法개정을 통하여 3年 以上 거주한 北歐國 出身 外國人에게 지방선거 (被)選舉權을 인정하였다. 이는 1981년 5월 30일의 法改正을 통하여 모든 外國人에게 확대되었다. 1978년 3월의 地方選舉에서는 12,102명의 外國人 유권자 중 7,21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59.6%), 外國人 當選者는 없었다.11)

1981년 11월 地方選舉에서는 31,787명의 外國人 有權者가 투표권을 행사하였고(61.3%) 3명의 外國人이 市議員으로 當選되었다.

③ 노르웨이: 1978년 法改正에 따라 3年 以上 거주한 北歐國 出身 外國人에게 地方選舉 (被)選舉權을 부여하였다.12)

1983년에는 재차 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 참정권은 모든 外國人에게 확대되었다.

④ 네덜란드: 1981년 3월에 발표된 少數者對策覺書 草案에서 外國人 居住者에게도 地方選舉 選舉權을 부여하자고 제안된 이후, 1983년 2월 17일 공포된 네덜란드 改正 憲法에 따라 外國人에게도 (被)選舉權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13)

1986년의 지방선거에서는 7명의 터키인을 포함한 14명의 外國人이 當選되었으며, 外國人 有權者의 3분의 2는 노동당에 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일찌기 1963년 선거법 이래 國籍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6個月 以上 거주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모든 外國人에게 地方選舉 選舉權을 인정하였고, 1974년부터는 被選舉權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外國자본을 유치하여 工業化를 이루려는 정책의 소산이라고 한다.14)

⑥ 스위스: 스위스 聯邦憲法 제74조 4항에 따라 지방 레벨에서의 참정권 부여 범위는 각 州(Canton)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2개 州가 外國人의 (被)選舉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Neuchatel州는 1849년 이래 外國人의 선거권을 인정하여 왔다.15)

단 그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여 1981년의 法개정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永住權



(settling permit)16)을 가진 外國人으로서 그 지방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被)選舉權을 인정하고 있다. Jura州는 1980년 1월 1일 州 창설 이래 同州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外國人에게 (被)選舉權을 부여하고 있다.

⑦ 독일: 독일에서는 1989년 2개 地方自治團體가 外國人의 (被)選舉權을 인정하는 法을 제정하였다. 1989년 2월 5일 주민의 8분의 1이 外國人인 함부르크市는 18세 이상으로 서독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外國人에게 區議會 (被)選舉權을 주는 法을 통과시켰다.17)

또한 Schleswig-Holstein 州 역시 5년 이상 거주하고 本人이 신청하는 경우 (被)選舉權을 주는 法을 1989년 2월 1일 가결하였다.18)

그러나 독일에서의 이러한 법들에 대하여 1990년 10월 31日 聯邦憲法裁判所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同裁判所는 기본법 제20조 2항과 제28조 1항의 해석상 外國人 선거권의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判示하였다.19)

⑧ 영국: 영국은 英國臣民(British Subjects)과 아일랜드인에게 모든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20)

영국신민 속에는 영국인뿐 아니라 해외 식민지인은 물론 모든 영연방회원국 국민도 포함된다. 다만 일정한 거주요건을 요구하고 있다.21)

영국의 경우는 일반 外國人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으로 영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 출신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하의 국가 역시 유사한 경우이다.

⑨ 오스트레일리아: 6個月 이상 자국에서 계속 거주한 英國臣民(British Subjects)은 선거권을 가지며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영국신민은 피선거권도 인정받는다.22)

⑩ 뉴질랜드: 英國臣民과 아일랜드人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모든 (被)選舉權을 향유한다.23)

⑪ 포르투갈: 헌법 제15조 3항은 포르투갈語 상용국 출신자들은 條約이나 相互主義에 기하여 外國人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권리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일한 條約은 브라질과 체결한 것으로서 5년이상 포르투갈에서 거주한 브라질人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된다.24)

⑫ 스페인: 1978年 憲法 제13조 2항은 條約이나 法律에 의하여 相互主義的으로 外國人에게도 選舉權만은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의 국민투표에서 外國人에 대한 選舉權 부여가 거부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헌법 제13조 2항에 따라 外國人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만들어진 바 없다.25)

⑬ 유럽共同體(EC): 유럽議會의 거듭되는 요청 끝에 1988년 6월 EC위원회는 地方自治體 選舉를 外國人에게 개방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최소한 EC 회원국 출신자에게 지방선거권 개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26)

### 3. 在日 韓人의 選舉權 獲得運動

日本에서는 현재 在日 韓人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外國人의 選舉權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公職選舉法 제9조 1항은 日本國民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衆議院 議員과 參議院 議員 選舉權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 제2항은 20세 이상의 日本國民으로 3개월 이상 계속 市町村의 區域內에 주소를 갖는 자는 그가 속한 地方公共團體의 議員 및 長의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1항은 日本國民만이 衆議院과 參議院 議員, 都道府縣 議會 議員과 知事, 市町村議會 議員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日本에서는 日本國民만이 모든 선거의 (被)選舉權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27)

이에 대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일부 在日 韓人 지식인들은 在日 韓人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킬 방안의 하나로 우선, 地方自治體 選舉權 획득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거권 이전에도 生活上 보다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制度的 差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選舉權 問題는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大阪 거주 일단의 在日 韓人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는 請願을 제출한 바 있고28) 1988년 가을 「民族差別과 싸우는 連絡協議會」(民鬪連) 제14차 전국 교류집회에서 제시된 "在日 舊植民地 出身者에 관한 戰後 補償 및 人權保障法案"에서도 5年 이상 거주자에게는 地方自治體 參政권 부여를 요구하였다.29)

급기야는 1990년 9월 14日 金正圭 등 大阪居住 在日 韓人 2세 11명이 定住外國人의 地方 選舉權을 부인하는 日本의 現行地方自治法, 公職選舉法 등의 관계규정은 違憲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原告들은 日本憲法 제93조 2항이 地方自治體 長과 議員을 地方公共團體 住民이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地方自治法 제10조 1항은 市町村 區域內에 주소를 갖는 자는 당해 市町村 및 이를 포괄하는 都道府縣의 住民으로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外國人인 住民에게는 선거권이 부인되는 것은 違憲이라고 주장하였다.30)

최근 韓·日 양국간에 타결된 在日 韓人 後孫 法的 地位 協商 過程에서도 한국정부는 제일 한국인 후손에 대한 地方選舉權 부여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31) 일본측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不可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여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고 後孫 法的 地位 問題가 타결된 바 있다.32)

사실 在日 韓人 중에는 韓·日合併其間中 日本에서 選舉權을 행사하던 사람들도 생존하여 있다. 韓·日合併時에는 在日 韓人들도 日本人과 같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在日 韓人의 선거권이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25년 보통선거법이 성립된 이후인데 1929년에는 처음으로 在日 韓人 입후보자도 등장하였다.33)

日本이 戰時體制化됨에 따라 在日 韓人 勞働者 數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유권자 비율도 무

시못할 정도로 되자 일부 입후보자들은 한글 인쇄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東京에서는 親日人士인 朴春琴이 衆議院 議員으로 두번이나 당선되기도 하였다. 日帝期間 중 市會 議員으로는 연 30명, 區會 議員으로는 2명, 町會 議員으로는 연 22명이 당선된 바 있다.34)

日本이 제2차대전에서 패전하여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 되자, 당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在日 韓人의 국적이 日本이라고 주장하면서도35) 일련의 法改正을 통하여 기존의 참정권은 상실시키었다. 즉 1945年 衆議院議員 選舉法, 1947年 參議院議員 選舉法, 1947年 地方自治法, 1950年 公職選舉法 등은 모두 附則에 戶籍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者는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규정하여, 合併其間中 日本 戶籍法이 아닌 朝鮮戶籍令의 적용을 받던 在日 韓人의 참정권을 부인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對日平和條約 발효일을 기하여 在日 韓人의 日本國籍은 상실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36)

外國人の 選舉權이 일체 부인되고 있는 현 일본제도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엇갈린다. 첫째, 現行 憲法上 중앙 레벨이건 지방 레벨이건 어떠한 선거에서도 外國人 參與는 不可하다는 입장,37) 둘째,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중앙 레벨의 선거권 부여는 선거관계 헌법조항의 개정을 통하여도 不可하다는 입장,38) 셋째, 現行 憲法上 중앙선거는 不可하나 관계법률만 개정하면 地方選舉權은 외국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입장,39) 넷째, 關係法만 개정되면 현행 헌법상으로도 外國人이 중앙 및 지방선거 모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40) 다섯째, 外國人の 地方選舉權 參與를 부정하고 있는 현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1)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42)

일단 外國人の 地自體 選舉權 부여가 현행 일본헌법상 가능하나에 대하여 상반되는 입장을 대비시켜 본다.

첫번째 不可論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헌법의 國會議員選舉權(제15조)과 地方議會選舉權(제93조 2항)은 모두 제1조 國民主權 條項에서 직접 파생된 권리이며, 이 때의 國民이란 곧 日本國民 만을 가리킨다. 비록 地方自治 條項에는 그 주체를 住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도 제15조 1항상의 國民과 제93조 2항상의 住民은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차이는 地域的 幅의 廣狹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조항상의 住民에는 外國人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43)

이에 대하여 可能論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93조 지방자치 조항은 主體를 住民으로 하고 있고, 住民이란 "地方自治團體를 구성하는 者, 즉 그 區域內에 住所를 갖는 者"를 가리킨다고 봄이 통설이므로44) 문리해석을 하여 볼 때 제93조의 住民이 외국인을 반드시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헌법 제15조 1항 국회의원 선거조항은 國民主權原理(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93조 2항은 직접적으로는 제92조 地方自治 條項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므로 제93조 2항은 가급적 地方自治의 취지에 합당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일본 전국에 거주하는 70만이 넘는 定住 外國人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地方自治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外國人の 地方選舉權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45)

이상 어느 주장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별도로 내리지는 않고 결론으로 넘어간다.

#### 4. 結

外國人の 選舉權을 부인하며 외국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열등한 지위만을 부여하여 온 뿌리는 國民國家論에 있다. 國民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지며, 國家는 國民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같이 상호 밀접한 관계하의 國民 만이 국가운영에 참여할 權利와 責任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外國人은 국가라는 政治集團에 소속되어 운명을 같이할 일원은 못된다고 보아왔다.46)

또한 현지사정에 밝지 못한 外國人은 국가운영에 참여할 지식이 부족하므로 올바른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왔다.47)

따라서 內·外國人 平等保護原則의 확산 추세 속에서도 外國人の 선거권은 부인되어 왔고, 이는 국가의 自己 保存權에 입각한 主權行使로서 수락되어 왔다.48)

그러나 外國人の 선거권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교류의 시대에 있어서도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며,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지역주민화된 外國人에게는 地方選舉權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비록 그들이 外國人이라 할지라도 지역운영에 필요한 세금은 동일하게 내며 지역주민과 같은 經濟狀況의 지배를 받게 되며, 동일한 도로를 통행하며,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같은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外國人이라 하여 별다른 면제권을 향유하지도 않는다. 그 지역에 생활근거를 갖고 거주하는 外國人은 이렇듯 生活의 모든 면에서 國籍者와 별반 차이가 없다.49)

그들 중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차 現地 國籍을 취득할 자도 적지않을 것이다. 地方自治의 근본 취지로는 운영규범의 定立者와 受命者間的 거리를 단축시키고, 地域的 特性을 고려한 立法을 가능하게 하며, 그 지역에 관한 專門知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政黨을 지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住民間的 지역적 연대를 강화시킨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체 운영에 관한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國民이라기 보다는 住民이며, 모든 면에서 동일한 生活圈에 속하는 定住 外國人을 지방자치체 운영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地方自治의 이념을 훼손시킬 우려마저 있다.50)

그런 의미에서 定住 外國人에게는 住民으로서의 일정한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대접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外國人에게 選舉權까지 부여한다면 과연 內國人과 外國人間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결과적으로 外

國人이 오히려 우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外國인이 선거권을 향유한다면 출신국에 따라서는 本國과 居住國 양쪽에서 이중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도 나올 수 있다. 選舉權까지 행사할 정도로 그 사회와의 유대가 깊어졌다면 차라리 歸化를 하라는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이상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 外國人 投票權에 대한 논의를 모든 선거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선거 레벨에 국한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內國人과의 완전히 동등한 選舉權은 못되는 것이다. 설사 外國인이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內外國人間에 엄연한 구별이 많이 남는다.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한 최고 공직에는 外國인의 就任을 금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外國인은 出入國管理法상의 등록의무 등 별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 長期居留 外國人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로 入國할 때에는 內國人보다는 규제가 많다. 外國인은 內國人과 달리 경우에 따라서 추방당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外交的 保護權 行使는 國籍國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자기 가족의 이민신청시 外國인은 內國人보다 不利한 立場에 處한다 등등. 선거권을 원하는 外國인은 歸化를 하라는 주장 역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요청의 핵심을 빚겨나가는 답변이다. 外國인의 地方選舉權 부여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住民의 權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國民만의 權利임에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歸化許可時에는 신청자가 거주국의 일원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건 구비를 필요로 한다.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여 자동으로 귀화가 허가되는 것도 아니며 해당국의 재량이 인정된다. 사실 居住國의 政治生活에 참여할 수 없는 者는 그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社會에의 통합은 참정권과 국적을 부여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귀화 신청자에게 먼저 社會에서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전말이 뒤바뀐 느낌이다.51)

또한 外國인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때 그가 本國 선거에도 참여한다면 이중의 권리행사라는 주장 역시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두군데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하여도 어느 한쪽에서의 선거에 부분적 왜곡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며 他人의 權利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52)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역시 관계법을 개정하여 長期居住 外國인에게는 지방자치제 (피)선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53)

특히 몇대에 걸쳐 이땅의 住民으로 살고 있는 駐韓 華僑의 경우 그들의 목소리가 국내정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사실 外國人 處遇에 관한 국제법 원칙은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때 浮上한 것이다. 그들은 현지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 현지국의 경제활동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폭도 늘어났다. 국가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일시에 없어진다면 일정부분의 경제운영이 곤란에 빠질 지경까지 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면에서는 內國民 待遇가 보편화되고 있다. 현지인과의 혼인 등 신분적 교류도 적지않다. 특별한 상황이 돌발하지 않는다면 한정없이

계속 외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서 일정한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부당한 일도 아니다.54)

外國인은 곧 참정권 배제라는 종래의 고정관념은 이제 수정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在日 韓人과 같이 數代를 外國人으로 살아 온 집단에 관하여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 <주>

- 1) A.Evans, The Political Status of Aliens in International Law, Municipal Law and European Community Law, 30, ICLQ 20,20(1981).
- 2) 우리나라 出入國管理法 제16조 2항, 제45조.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2(1970), p.709; Goodwin-Gill, International Law and the Movement of Persons between States (1978), p.253 참조.
- 3) Brierly-Waldock, The Law of Nations. 6th ed.(1963), p.278; M.Shaw, International Law, 2nd ed.(1986), p.428; Goodwin-Gill (supra. No.2), p.62; W.McKean, Equality & 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1983), p.199; R.Mullerson & G.Tunkin ed., International Law,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90, p.214; H.Santa Cruz, Study of Discrimination in the Manner of Political Rights, UN Publication Sales No.63 XIV 2, pp.26~27; D.Elles, International Provisions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Non-Citizens, UN Publication Sales No.E80.XIV.2), para. 278; 장효상, 현대국제법(박영사, 1987). p.304; 김정건, 국제법(박영사, 1987), p.461 및 제2차 하바나 미주 외무장관 최종선언서(1940) 등 참조.
- 4) A.Evans(supra. N.1). p.21.
- 5) A.Roth, The Minimum Standard of International Law Applied to Aliens (1949), p.151 참조.
- 6) 또한 世界人權宣言 제21조 역시 참정권은 自國에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European Convention on Establishment 제13조 및 제3추가의정서 (a) 역시 외국인의 정치 활동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 7) 同旨 A.Evans (supra. No.1). p.24.
- 8)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로 구성.
- 9) Local Government Act Chapter 2, Section 3 & 4. 단, 戰時 등에는 제한 가능 (Aliens Act, Section 103 참조.)
- 10) 당시 외국인 거주자 수는 약 27萬名, 스웨덴인의 투표율은 91.8%였으므로 외국인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 11) 덴마크인의 투표율은 73.2%. J.Forwein, Study of Civic Rights of Nationals of Other Member States in Local Public Life (Council of Europe RM-SL(82) 55 revised, 1983) pp.15에서. 이 책은 以下 Forwein Report로 약칭함.
- 12) 이에 따른 최초의 선거가 1979년에 있었으나, 유권자 명부에 國籍이 표시되지 않음에 따라 外國人만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Forwein Report (supra. N.11) p.16.
- 13) 徐龍達, 國際化時代における定住外國人の 地方自治體參政權, 地方自治研究 1989年 2月號 (Vol.4 No.1). p.8; H.U.Jessurun d'Oliveira, Electoral Rights for Non-Nationals, 31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59, 59-60(1984).

- 14) H.U.Jessurun d'Oliveira (supra, N.13) p.63.
- 15) 그 이유는 당시 條約 해석의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16) 대개 10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 특수한 경우 5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인정함.
- 17) 이에 따라 함부르크 거주 18萬 外國人 중 9萬名이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
- 18) 단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 本國이 독일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따라서 덴마크인, 아일랜드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네덜란드인, 스위스인 등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以上 독일의 例에 대하여는 齊藤純子, 自治體レベルの外國人の人權, ジュリスト 1989年 6月 15日 (No.936), p.73에서.
- 19) 統一日報 1990年 11月 14日字. 基本法 제20조는 모든 國家權力은 國民에서 유래하며, 議會는 國民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外國人の 선거권에 관하여 社民黨은 긍정적 입장이며, 위의 2개 지역 모두 社民黨 장악지역이었다. 그러나 집권 基民黨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었다. 독일에서 外國人 地方選舉權에 관한 찬반 논의에 대하여는 長尾一絃, 外國人の選舉權,, 法學教室, 1985年 3月(No.54), p.23 이하 참조.
- 20)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49, Section 2.
- 21) 以上은 영국 본토(브리튼 섬)의 경우이며 북아일랜드에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Forwein Report (supra. N.11) p.17.
- 22) 헌법 제16조, 제34조, 선거법 제39조, 69조 참조.
- 23) 선거법 제25조, 39조 참조.
- 24) Convention on Equality of Rights and Duties of Brazilian and Portuguese Nationals(1971年 9月 7日). Frowein Report (supra. N.11) pp.19~20.
- 25) 長尾一絃 (supra. N.19). p.21.
- 26) 統一日報 1990年 11月 14日字 등 참조.
- 27) 地方自治法 제11조, 18조, 19조 등에도 동일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28) 韓國日報 1986年 11月2日字
- 29) 拙稿, 最近 日本에서의 定住外國人法 制定運動 海外同胞, 1988年 冬季號 (No.30), pp.45~48
- 30) 統一日報 1990年 9月 15日字. 이 사건에 관한 제1심 공판은 1990年 11月 29日부터 시작되었다. 統一日報 1990年 11月 30日字. 기타 徐龍達(supra. N.13) pp.2~3 참조.
- 31) 東亞日報 1989年 7月 19日字 등. 한국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1990년 3월 14일자 결의 참조. 統一日報 1990年 3月 16日字.
- 32) 東亞日報 1991年 1月 10日字.
- 33) 본래 日本은 1889년 최초로 衆議院議員選舉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납세요건 등의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합병 당시 日本의 選舉法이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자는 日本人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34) 이에 관한 상세는 森田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1955), pp.27~29 참조.
- 35) 拙稿, 戰後 日本의 在日韓人 國籍處理에 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9집 (1988), pp.201~202 참조.
- 36) 1952年 4月 19日 日本 法務部 民事甲 通達 第438號 「平和條約에 따른 朝鮮人, 臺灣人 등에 관한 國籍 및 戶籍事務處理에 관하여」.
- 37) 佐藤幸治 基本權の主體, 阿部照哉編, 學說と判例 I 憲法(1976), p.67.
- 38) 長尾一絃 (supra. N.19) p.25, 그는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절차에 참가하는 제도(日本憲法

- 제69조 1항)를 전제로 하는 한 중앙 레벨의 선거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 39) 萩野芳夫, 基本的人權の研究 (1980) p.255; 大沼保昭, 在日朝鮮人の 法的地位に關する 考察(六), 法學協會雜誌 第97卷 4號, p.498; 金東勳, 定住外國人地方自治體の參政權 シンポジウム 在日韓國人は何を求めるか(1990年 5月 15日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 主催 主題發表文集), p.36; 長尾一絃 (supra. N.19) pp.25~26 등.
- 40) 奥田劍志郎, 外國人の法的地位, 社會勞動研究 第27卷 2號, p.77, 長尾一絃 (supra. N.19) p.26에서 再引.
- 41) 註 30 및 關聯本文 참조.
- 42) 과거에는 外國人에 대한 선거권 부여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번째 입장이 표명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 43) 이상 長尾一絃 (supra N.19) p.25에서의 정리. 단, 그는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 44) 地方自治法 제10조 참조.
- 45) 以上 長尾一絃(supra. N.19) pp.25~26의 정리.
- 46) A.Evans (supra. N.1) p.31; G.Rosberg, Aliens and Equal Protection: Why not the Right to Vote? 75 Michigan Law Review 1092, 1111 (1977) 참조.
- 47) G.Rosberg (supra. N.46), pp.1117~1125 참조.
- 48) 소련의 Chishov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反소 파괴활동을 위한 호조건이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함. Chishov, International Law (Academy of Science, USSR), p.163, D. Elles supra. N.3) para. 282에서 再引.
- 49) G.Rosberg (supra. N.46), pp.1111~1112.
- 50) D.Breer, Die Mitwirkung von Ausländern an der politischen Willenbildung in der BRD durch Gewarung des Wahlrechts (1982), s.88ff. 長尾一絃(supra. N.19), p.24에서 再引.
- 51) H.U.Jessurun d'Oliveira (supra. N.13), p.70. 이에 대한 반대입장으로는 Forwein Report (supra. N.11), p.89.
- 52) 한편 外國人에 대한 중앙 레벨의 선거권 인정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이는 國民主權原理에 위배되어 不可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國家가 어떠한 운영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외국인에게 중앙선거권도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H.U.Jessurun d'Oliveira (supra. N.13). pp.68-72 참조.
- 53) 우리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 조항 역시 住民이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법 등의 선거조항만 개정하여 外國人 地方 選舉權 인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 54) H.Mosler,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Legal Community (1980), pp.57-58 참조.

#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sup>1)</sup>

장수현(부산외국어대학 교수)

한국 화교가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역사적 굴곡을 겪어온 지 이미 한 세기를 훨씬 지났다. 이들이 명백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내 화교의 존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래에 화교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화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IMF 위기의 돌파구로서 해외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유동적인 화교 자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해외 화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화교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화교가 갖는 중요성이 여러 지자체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거대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에 주목했고, 차이나타운 건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제시되었다.<sup>2)</sup>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와 맞물리면서 국내 화교의 문제가 학계와 정치권 일각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재일동포 정책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배타성을 우리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비판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국내 화교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즉, 차이나타운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화교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 역시 그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성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타문화간의 접촉과 교류가 일상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비취볼 때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우리의 외국인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국내 화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새

1) 이 논문의 인천 화교 관련 자료는 대상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한 "인천지역의 화교와 차이나타운 연구"(공동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것이다. 인천 자유공원 일대의 화교 정착촌에 대한 현지조사는 1999년 봄부터 2001년 초에 걸쳐 주로 방학기간에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실시했다. 조사에 대한 화교들의 강한 거부감과 단기적 접촉에 따른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탓에 이곳 화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다행히, 2000년 2학기 서울대 인류학과 '현지조사실습' 과목 수강생들이 이 지역 화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소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학생들과 오명석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2001년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을 때 토론자로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신 박은경 선생님께 충심에서 우러난 감사를 드린다. 한국 화교에 대한 그분의 친구적인 연구가 없었더라면 이 논문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2) 예를 들어, 인천시는 송도지구에서 차이나타운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워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인 자유공원 일대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는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고 그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소개할 것이다. 서울 독섬과 상암동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최근 일산 지역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그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http://www.seoulchinatown.com> 참고).

롭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이든 법적 지위의 관점이든, 국내 화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올바른 정책적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화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또 모국과 주재국이라는 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규정해 왔는지를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화교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 힘들다. 이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가 이들의 내면에 형성한 특정한 정향(orientation)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이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구상이 발전성과 실천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지난 100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살아온 한국 화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문화적 정체성은 어떠한지를 주로 인천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공원 일대의 화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국내 화교가 우리 사회에서 겪어온 배제와 차별의 역사를 통해 그 사회적 위상을 파악해 보자.<sup>3)</sup>

### 배제와 차별의 역사

한 종족집단(ethnic group)의 경계선은 다른 집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바뀐다(Barth 1969). 한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과거와의 연속성에 기인할 뿐 아니라 타자에 의해 그렇게 불리고 규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산(diaspora) 집단의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은 주재국 사회가 이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동남아 화교사회들의 경우에 확실하게 드러난다.

동남아 화교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각 국가의 상황적 조건에 따라 화교 집단의 정체성이 현저하게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박사명 외 2000). 화교의 귀화를 권장한 필리핀의 경우, 화교들이 소수 민족 집단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버리고 점차 필리핀 국민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반면, 말레이인과 배타적인 종족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은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중국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동화 정책을 취한 태국의 경우, 화교의 중국적인 정체성은 많이 약화되어 잠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한국 화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의 연속성에 대한 근원주의적 집착이 상당히 강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사회의 배타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자신들의 중국적 정체성에 매달린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화교들을 항상 이방인으로 간주하였고 또 그들이 이방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다. 역대 한국 정부가 교육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화교들에게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어렵게 만든 우리 국적법에서도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제 정책에서도 화교에 대한 배타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내 화교는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3) 이 글의 논의 대상은 남한의 화교에 국한된다. 북한 화교의 역사적 경험과 현황에 대해서는 박은경(2000)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다.

무역을 중심으로 탄탄한 경제적 지위를 굳히고 있었다. 이들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튼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들을 대국인으로서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 이후 대륙과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되고 화교들의 주된 경제활동이 음식업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화교를 얹잡아 보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박은경 1996: 111-112).

이와 같은 시선의 변화는 한국인들이 화교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했던 "때국놈", "짱꼴라", "짱깨" 등과 같은 경멸적인 명칭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화교들은 이런 비하적 표현들을 들으면서 강한 반감을 가졌고 자신들이 한국사회의 이방인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한 국내 화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 글은 화교들이 그런 명칭에 대해 얼마나 강한 반발심을 가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때국놈, 짱꼴라, 짱깨..... 들어보셨는지. 참뜻과 어원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중국 사람이나 화교를 지칭하는 욕이나 멸시의 뜻으로 80년도 전후까지 한 때 널리 퍼져 있었지요. 어원을 찾아 삼천리 경산을 휘젓고 다녀 진실과 참뜻을 찾아죠.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바로 알고 바로 쓰자는 뜻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때국놈) (大國人) - 대국인 뜻을 풀어보면 (큰 나라의 사람) 즉 중국인을 대국사람으로 존경하여 대국인의 칭호에 능을 갖다 붙여 표현을 했더군요. (짱꼴라) (張果老) - 장과로 이는 중국 고대신화에 전해오는 八仙過海의 신선의 이름으로 - 장과로, 한중리, 한상자, 이철과, 조국구, 여동빈, 남채화, 하선고 - 8인 중 제일 으뜸의 신선으로 추앙받는 노성 신선의 이름이다. 짱꼴라의 어원은 장과로로부터 유래되었다.(짱깨) (掌櫃) - 장과의 뜻을 풀어보면 손으로 장악할 (장)에 돈궤적의 (궤) 즉 돈궤적용 장악하여 관리하는 사람, 요새 말로 금고를 관리하는 사장님이라는 뜻이다.

화교들은 때때로 자신들을 깔보고 놀려대는 한국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 선린동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은 "땃놈"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는 한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소개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인천 자유공원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빨리빨라" 하면서 자신들을 놀리며 지나가는 한국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던 일을 털어놓았다. 패싸움을 하다가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한국 경찰이 자기들보다는 한국 아이들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분노와 함께 자신들이 다른 존재라는 점을 철실하게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차별의 경험과 더불어 화교들에게 가해진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과 제재는 화교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박은경 1986, 1996 참고).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화교들이 많았으나 한국 정부의 불공평한 조치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0년 초에 외래 상품의 불법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취해진 창고 봉쇄 조치는 물건 보유량이 많았던 화교 무역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이들은 공식 환율보다 서너 배 비싼 암시장을 통해 외환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화교 무역상들이 한국인과 공동 명의의 회사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동업자간의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화교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졌다. 1961년에 시행된 화폐 개혁은 현금 보유량이 많은 화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같은 시기의 토지규제법도 화교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 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

문에 화교들은 집과 토지를 몽땅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생업의 기반을 잃게 되었다. 일부 화교는 재산을 한국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으나 그 중에서 한국인 명의자에게 재산을 빼앗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토지법은 1968년에 개정되었다. 새 법에서는 주거 목적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토지 200평까지는 사전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화교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기도 했고 한국인 친구의 이름을 빌어 재산을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아내나 친구의 배신으로 재산을 완전히 날려 버렸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불 낫을 잃어 해외로 이주를 떠난 사람들도 생겼다.

중과세 제도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동일 업종의 상인에 비해 한 지역에서 오래 영업을 한 상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했다. 따라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경향이 강한 화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였다. 이런 문제는, 중국음식에 대한 가격 인상 제한이라든가 중국음식점에 대한 밥 판매 금지 등과 같은 특정 시기의 차별적 조치들과 함께 화교들 사이에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였다.

이상과 같은 법적·경제적 차별은 이제 대부분 과거의 일이 되었다. 특히 1998년에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화교들의 뿌리내리기를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한국 땅에서 갖 들어온 외국인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섭섭함을 안겨주며 다름을 인식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들은 아무리 신용이 좋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면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 존재해온 회의(會議)<sup>4)</sup>라는 일종의 제조직을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거나(박은경 1986: 149-150 참고), 화교 중심의 신용금고를 이용했다.<sup>5)</sup> 아니면 또 신분 증명이 필요한 각종 거래를 할 때마다 이들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제시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전산망에 뜨지 않아서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교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휴대폰 신청할 때의 불편이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휴대폰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 규정 탓에 큰 불편을 겪으며 이때 자신이 한국사회 속의 이방인임을 절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거의 차별적 정책들이 화교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갖가지 차별의 경험은 개인적 기억으로서 화교들의 가슴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공유됨으로써 집단적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배제와 차별의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은 화교들의 내면에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프게 각인시켰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배타성과 국내 화교의 중국적 정체성 인식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다음에는 국내 화교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얼마나 강한 내적 결집력과 문화적 동질성을

4) 이것은 사업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큰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하는 사람이 그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자 없이 일정한 액수를 장기간 신용으로 빌어쓰는 제도이다.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목돈을 필요로 할 때 호의를 갚는 것이 관례이며, 바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된다.

5) 화교들의 신용금고는 인천과 부평에 한 개씩 있었는데, 두 곳 모두 IMF 위기 때 부도를 냈다. 전체 부도액수가 몇 백억원 정도에 달해 인천 화교사회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 심지어, 피해자 가운데는 자살하거나 홧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화교 공동체와 문화의 쇠락

화교와 같은 이산(diaspora) 집단의 자기 정체성 인식에서 공동체(community)와 문화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는 일차적 귀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실체이다.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자기 문화를 배우고 실천한다(Cohen 1985: 11-21). 한 집단의 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가치체계가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역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강한 귀속 의식을 부여한다(Heberer 1997: 133).

<표 1> 거주 목적 타이완 국적자의 지역별 분포, 2000년

지역	인구수	지역	인구수
서울	8,456	경북	536
부산	1,989	경남	401
경기	2,109	제주	284
강원	621	울산	321
충북	719	대구	1,022
충남	800	인천	2,377
전북	736	광주	359
전남	303	대전	550
총계		22,083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공동체를 통한 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화교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화교 인구의 감소, 지역 공동체의 와해, 전통 문화의 쇠퇴와 한국 문화로의 동화 등이 중첩되면서 국내 화교의 '중국성'(Chineseness)을 희석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남한의 화교 인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45년에 12,648명이었던 남한 화교는 1950년대 중반에 2만명 선을 넘어섰고, 1972년에 3만 3천명 정도까지 늘어났다(박은경 1986: 118). 그 이후 화교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서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0년 현재 2만 2천명을 조금 넘는 화교가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표 1 참고).<sup>6)</sup> 생활의 근거지가 대만이나 중국이면서 한국의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제 거주 인구는 2만 명에 훨씬 못 미칠

6) 70년대 중반 이후의 인구 감소 추세는 차별적인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만이나 미국 등지로 이주했던 것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박은경 1986, 제5장 참고).

것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화교사회는 지역 공동체의 쇠락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천 선린동<sup>7)</sup> 일대 화교 정착지의 예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의 인천 자유공원 부근 언덕 5천평 정도가 1834년에 청국인의 조계지로 확정된 이래 이 지역은 청관(淸館)의 소재지로서 한국 화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한 때 이름이 쟁쟁했다가 폐가로 변해버린 중국요리집 공화춘의 우중충한 모습처럼 쇠락하고 한산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전철 1호선 종점인 인천역에서 내려 자유공원 쪽으로 가파른 경사길을 따라 올라가면 중국 음식점과 상점, 한약방, 화교 학교와 교회 등이 밀집해 있는 화교 정착지가 나타나는데, 그 규모나 중국적 정취에서 미국 보스톤이나 시카고 등지의 차이나타운에서 느꼈던 활기를 감지하기는 힘들다.<sup>8)</sup>

1900년 당시 2,000명 이상의 화교가 거주했다고 하는 이곳에 오늘날은 겨우 500명 남짓한 화교만 남아있다.<sup>9)</sup> 법무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0년 9월말 현재 선린동에 163명, 북성동에 368명이 살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구는 통계숫자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 짐작한다. 특히 중국 문화의 전승을 강조하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한 화교 1, 2 세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 고령으로 이미 사망했거나 노후를 자녀나 친척이 있는 대만이나 중국 등지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공동체가 자체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표시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대 화교 업소의 현황을 보면 2000년 말 현재 중국음식점 9, 한의원 1, 무역업 2, 식당 재료업 1, 문방구 1, 향 가게 1 개가 있다.<sup>10)</sup> 과거 청관 소재지이자 이주 관문으로서 한국 화교의 중심을 이뤘던 이 지역의 상권이 영세 규모의 업소 15개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화교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 현지 화교의 말로는, 그 동안 한국 사회의 배타성과 경제적 조건의 악화 때문에 떠날 사람은 거의 다 떠났고, 현재는 남을 사람만 남아서 화교 공동체의 명맥을 겨우 잇고 있다.

화교 공동체의 쇠퇴는 유명무실해진 화교협회의 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1887년 중화회관(中華會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60년에 현재의 화교협회라는 명

7) 현재는 행정구역상 북성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러한 사정은 부산의 화교 정착지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상해시와 자매관계를 맺은 부산시가 과거 화교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부산역 맞은 편 일대를 중국인의 거리로 공식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거리임을 표시하는 페루와 중국 음식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중국 거리의 분위기를 찾기가 힘들다. 최근 러시아 상권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이곳은 오히려 러시아타운의 분위기를 더 강하게 풍긴다.  
9) 인천 전체의 화교 인구는 1970년에 4천명을 상회하여 계속 4천명 전후로 유지되다가, 1980년대 들어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이재정 1993: 53-53). 출입국관리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의 화교 인구는 총 2,877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자유공원 일대를 포함한 중구에 살고 있는 화교가 1,161명으로 가장 많다.  
10) 중국음식점 가운데 두 곳은 최근에 새로 들어섰다. 인천시와 중구청의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 등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기 때문이다. 중국음식점이 이 일대 상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인천지역 전체를 볼 때도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인천화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인천지역 화교의 경제활동 가운데 음식점이 81개소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의원 16개소이다(韓國仁川華僑協會 僑情簡報, 2000).

칭이 확정되었다. 화교협회는 대만 영사관 및 한국정부와 화교들을 연결시켜 주는 행정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화교들에게 필요한 일반 업무를 수행했다. 이 조직은 화교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데 필요한 서류민증의 갱신을 비롯하여 외국여행을 위한 서류 작성,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신원 보증,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공, 전출입과 출생사망 신고 등을 담당했다. 그 때문에 화교협회는 화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현재는 인천화교협회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sup>11)</sup> 과거 협회가 담당했던 행정적인 업무 가운데 토지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해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행사가 처리하고 있다. 지금 협회의 고유 업무로 남은 것은 호적과 신원증명에 관련된 일이 고작이다. 협회는 화교와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이나 회원 복리의 증진, 그리고 대외 협조 및 홍보 등에 대해 더 이상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차이나타운 개발과 같은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인천시나 중구청을 상대로 대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 가운데 협회 대표자는 없었다. 이들이 교민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일은 쌍십절 행사나 음력 설날에 올리는 공동 제사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타이완 대표부나 중국 정부의 관원을 상대하는 것 정도이다.

선린동 화교 정착지가 그나마 화교들의 구심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화교학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화교학교는 유치부, 小學(초등학교), 中學(중고등학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가 세워진 것은 1902년이었으며 중학교 과정은 1957년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1964년에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타이완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눈에 띄는 차이는 한국어 교육이 일주일에 3시간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수는 1998년 5월 현재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7명이며 각 학년에 한 학급이 있다(仁川華僑學教概況與沿革, 1998). 유치부는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2000년 말 현재 모두 46명이 재학하고 있다.

화교학교는 모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그 자체가 민족성의 상징으로 간주된다.<sup>12)</sup> 화교학교가 자율적으로 민족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화교 교육에 대해 자유방임적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화교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화교 교육은 전혀 간섭을 받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산둥성 출신인 남한 화교들은 냉전 체제 하에서 자유진영인 타이완(중화민국)의 시민이 되었고 화교학교의 교육 역시 타이완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석미령 1999, 우심화 1999 참고). 한국과 중국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화교 교육은 여전히 타이완 체제를 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교의 국적 문제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불간섭 정책을 취하고 있다.

11) 협회의 재정은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회원에게 매달 500원씩 거두는 회비와 회원 업소의 회비, 서류 발급료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회 이사들의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이사회는 교민대회를 통해 선출한 1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회장이 3-5인의 부회장을 지명한다. 감사도 교민대회에서 5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12) 인천화교학교 교장으로 있던 C씨가 2000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그래서 화교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C씨는 화교학교 발전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내놓기도 하는 등, 화교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큰 인물이었지만 민족성을 상징하는 화교학교의 교장으로서 한국에 귀화한 것은 용납되기 힘들었다. 화교학교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C씨는 결국 교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화교학교들은 한국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덕택에 민족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조상의 후손들끼리 화교학교에서 중국어로 수업을 받고 중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일깨워주었다. 더 나아가 화교학교는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중국 문화의 유구성과 위대성을 알게 하여 학생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다.<sup>13)</sup>

학교가 화교들을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선린동 화교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의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화교학교 이전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중구청 쪽에서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화교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 화교들은 학교 이전이 화교의 상징이자 구심점을 없애므로써 화교사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녀교육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온 사람 중에 단 곳으로 갈 사람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화교학교가 민족 교육과 화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화교학교 폐쇄나 파행 운영이다. 화교학교가 가장 많았던 1974년에는 초등학교가 50개교, 중학교가 5개교 있었다. 이에 비해 1994년에는 화교학교 전체 숫자가 34개교에 불과했다(韓華教師聯誼會 자료). 1999년에는 화교학교가 26개교로 줄어들었다(외국인학교법제편제위원회 자료). 학교수의 감소와 함께 학생수도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천 화교학교는 1980년대에 중학교에 700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었고 소학교까지 합치면 1,000명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그 숫자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추세는 졸업생 숫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4년에는 졸업생 숫자가 120명이었으나 1997년에 44명으로 줄었다. 중학교는 1971년에 141명이 졸업했으나 1997년에는 40명으로 줄었다. 고등학교 역시 졸업생 숫자의 감소는 두드러져서 1975년 111명에서 1997년 31명으로 줄어들었다.

둘째, 화교학생 가운데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한국 내에서 진학하는 화교 학생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 최근까지 인천 화교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던 C씨의 추산으로는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이 초중고 전체 학생 가운데 3분의 1 정도다.<sup>14)</sup> 수원 화교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던 사람에 따르면, 학급의 반 이상이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곳도 있다.<sup>15)</sup> 물론,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화교학교가 한국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낮으며 아울러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셋째, 화교학교가 중국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들 사이에 한국어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교실 안에서는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며 중국어로 수업

을 진행하지만, 휴식시간이나 학교 바깥의 일상어는 한국말이다.<sup>16)</sup> 이런 현상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서울의 한성화교학교를 졸업한 30대 중반의 남자에 따르면 자기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과 간에 사용된 언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였다. 대개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꼭 필요할 때 중국어 단어를 끼워 썼다. 중국어로 말할 때 한국식 어미를 첨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가자"라고 할 때 "조우바(走吧)"라는 완전한 중국 표현 대신, 흔히 "조우(走)"와 "가자"의 "자"를 결합시켜 "조우자(走자)"라고 말한다.

한국어가 화교학생들의 일상 언어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몇 가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에 인천 화교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정문에 걸려있던 "我是中國人, 我愛說中國話"(나는 중국인이며 중국말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현수막은 화교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었다. 교사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교사들은 모국어를 잘 해야 외국어를 잘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교 안에서 한국말을 쓰다가 발각되면 벌을 가한다. 몰래 만화책을 보는 학생을 잡더라도 중국 만화책은 압수하지 않고 한국 만화책만 압수한다. 이와 같은 질박한 조치들은 현재 화교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모국어 보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sup>17)</sup>

화교학교와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화교학교가 화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저해하는 결과물 낳는다는 점이다(박은경 1996:113-114). 인간관계 중심의 삶을 그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학연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중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간에는 매우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며 그 관계는 한국인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된다. 화교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화교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약되며 그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인간관계가 대부분 화교사회 내부에 국한된다. 이것은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움을 말해준다.

화교 공동체의 약화는 중국문화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다. 비록 단순화된 형태이긴 했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과 같은 통과의례와 종교적인 활동에서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었다(박은경 1986: 203-204). 음력 설날에 조상과 여러 신들에게 차례를 드리는 풍습, 단오와 추석 등과 같은 절기 때 먹는 전통 음식, 결혼식 피로연에서의 음식 접대 풍습, 그리고 장례식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의례용품 등은 화교들에게 전통과의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전통 관습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흔히 중국 전통문화가 강조되는 곳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이다. 그러나 선린동 일대 화교들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많이 현대화되었다. 1930년대만 해도 전통 장례식을 치르는 집들이 있었다. 이런 집들은 망자의 저승길에 함께 보낼 종이 말과 종이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준비했고 종이돈을 태웠다. 그러나 근래에는 영안실에서 현대식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젊은 사람들

13) 인천 화교학교가 1996년에 舞龍隊(용춤 공연단)를 결성하여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4) 우심화의 글(1999)에서도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30 퍼센트 정도로 추산했다. 양필승 교수에 따르면 한성화교학교의 경우 그 비율이 1/3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15) 한국인 가운데 중국어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화교학교에 진학시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몇 명에 불과하지만 유치부에는 한국인 학생이 3분의 2에 육박한다.

16) 필자가 2000년 10월 10일 인천 화교학교의 쌍십절 행사에 참석했을 때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끼리는 학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한국어로 대화가 이뤄졌다. 한성 화교학교에 대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안시현 1998).

17) 젊은 세대에서 한국어 사용이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탓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화교 공동체의 전반적인 쇠퇴에 기인한다. 과거 화교 정착지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화교들간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분산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결과, 화교 아이들은 자라면서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화교의 밀집 거주지인 선린동 일대의 경우에도 1998년 현재 6 대 4 정도로 한국인 거주자의 수가 더 많다.

중에는 제사에 쓰는 전통적인 빵 대신 시중에서 파는 호빵을 쓰는 사람마저 있다. 음력설에는 만두 나눠 먹기, 전통 음악 듣기, 세배 다니기, 마작 놀이, 연회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공동체적 관행도 거의 사라졌다.

전통적인 종교신앙 역시 많이 약화되었다. 선린동 화교 정착지에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섬겨 온 신들을 모시는 의선당(義善堂)이 아직 남아 있다. 한말에 청관이 생긴 뒤 황허칭(黃合卿)이라는 무역상이 중심이 되어 사당 건립 기금을 모금했고 그 돈으로 산등에서 기와, 돌, 목재 등을 구입하여 이곳에 사당을 지었다. 이곳 사람들이 흔히 공소(公所)라 부르는 이 사당에는 중국 민간에서 숭배 받는 다섯 신이 모셔져 있다. 사당 대전 가운데는 불상이 놓여 있고 그 좌우로 사해용왕(四海龍王), 관우(關羽), 마조낭낭(媽祖娘娘), 그리고 청조 때 서양 연합군을 물리쳤던 공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 사당은 매달 음력 1일과 15일 이른 아침부터 12시까지 문을 연다. 사당 관리자에 따르면 이 사당에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중노년이다. 음력설에는 화교 사회 전체를 대표하여 화교협회 회장단이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전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교들의 참여가 적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와 같은 공동체적 종교 전통 역시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화교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김치, 고추장, 찌개 등과 같은 한국 음식은 이들이 먹지 않고는 살기 힘든 것들이다. 한국화된 자신의 모습을 말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김치 얘기다. 이들은 "하루라도 김치를 먹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니 한국사람이 다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타이완에 갔을 때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이 많았다는 한 어린 중학생뿐 아니라 중년에 접어든 화교 2, 3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한국성'(Koreanness)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상징의 하나인 김치의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국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의복에서도 중국 전통을 찾기는 힘들어졌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중국음식점 여종업원들이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을 제외하면 일상생활 중에 이곳에서 중국식 의상을 입는 사람은 전혀 없다. 간혹 경사스러운 일이나 명절에만 잠시 입을 뿐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것은 2000년 10월 10일, 인천 화교학교에서 열린 쌍십절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례 절차에 이어 화교학교 밴드의 음악 연주 순서가 있었다. 이 밴드는 몇 곡의 경쾌한 음악을 연주한 다음 최근 한국 드라마의 주제가로 사용되어 새롭게 인기를 끈 '침밀밀'(蜂蜜蜜)을 연주했고 이어서 한국 남성 듀오 클론의 '초련'을 연주했다. 이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거의 열광에 가까웠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화교학생들 역시 최신의 한국 유행가요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볼 때도 한국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스타크래프트나 인터넷 고스톱, 디아블로, 포트리스처럼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을 즐겨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한국 화교들이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쇠퇴와 문화적 전통의 단절, 일상생활의 한국화 등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성'(Chineseness)을 보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류사회로부터 사회적 배척을 당하는 동시에 일상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몸에 익히고 살아가는 이들 국내 화교는 스스로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뿌리로서의 중국/중국성과 삶으로서의 한국/한국성 사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한화'(韓國華僑)라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화'로서의 정체성

40대 중반의 화교 J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올려놓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의 인사말을 올릴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 화교 3세 주덕화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국 화교 학교를 마쳤고 대학도 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지금껏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저 역시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제 2의 한국인. 환경에 적응한, 겉은 중국인, 속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어엿한 중국인. 저의 자식들도 저와 같은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갖고 있지요. 물론 외국인이니깐 군대도 갈 수 없겠지요... (안 받아 주시겠...) 타고난 운명이지요... 1.1

이어서 그는 자기 가족의 이민사와 고향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었다.

現 中國 山東省 榮成縣 寧津(口字村)에서 할아버지께서 故鄉(고향)을 등지며 家族을 이끌고 조그마한 고기점이 帆船으로 黃海灘(서해안)을 건너 당시의 仁川 朱安에 임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서울에 정착하여 현재 연희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나이 9歲... 70년의 세월이 흘러... 韓國에서 태어난 제가 어언 40대의 華僑(화교) 3세대이니 아들 대까지 벌써 4세대가 되었네요. 98년 6월 뿌리를 찾아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감개무량하더군요. 그러니깐 할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이지요. 물어 물어 찾아가 보니 비록 적고 초라한 남동 방 2칸 짜리 돌로 지은 석조집이었고, 옛 모양 그대로 남은 채로 무수한 세월을 이겨냈고 또 한 저의 뿌리가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비록 안 계시지만 석조집에서 할아버지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옛날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속으로 중조 할아버지에게 인사도 올리도록 했죠. 아올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業蕙(업승)이와 業鴻(업홍)이가 있을 수가 있었다고.....

J씨의 글에는 '한화'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 느끼는 혼란이 잘 드러난다. 혈통과 문화의 뿌리, 다시 말해 과거와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J씨와 그 아이들은 중국인이다. 그러나 자기의 성장 과정과 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와 아들들은 한국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양쪽 모두이면서 동시에 그 어느 쪽도 아닌 존재임을 느끼고 있다.

J씨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고향인 웨하이(威海)에 갔을 때 느낀 바를 털어놓았다. 그는 IMF 위기 때 한국에서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난 뒤 새 사업거리를 찾아 웨하이로 가서 잠시 지냈다.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자신이 중국인과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김치와 고추장 없이 밥 먹는 게 힘들었고 중국 음식을 먹더라도 한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은 J씨에게서만 나타나는 경험이 아니다. 선조의 고향인 웨하이에 집을 마련해 놓고 인천을 오가며 보따리 장수를 하는 선린동의 L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환갑을 넘긴 화교 2세대로서 중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땅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경험했

다. 고향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오래 살다온 자기보다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더 무지함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고,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대구에서 웨하이로 건너간 '한화' G씨, 충청도에서 20여년간 중국 음식점을 하다 지쳐서 웨하이에서 다른 사업거리를 찾는 B씨 역시 모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한국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은 타이완에 거주하거나 다녀온 '한화'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 21' 제354호에 실린 타이베이 중성지에(中興街)의 한국 출신 화교들에 관한 기사를 보자. 여기서 기자는 한국 화교들이 여전히 김치, 된장, 고추장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한국화가 많이 된 사람들로써 타이완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옷가게를 경영하는 한 남자의 얘기를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점점 정사가 어렵다며 푸념을 늘어놓던 끝에 그는 "첫째 고향은 중국 본토, 둘째 고향은 한국, 대만은..." 이라며 말고리줄 흐렸다. 옆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대만은 덥고 습해서 싫다" 고 되보는 어주머니의 말에서 어디에도 정붙이지 못하는 '유민'의 처량함이 전해졌다. 우연히 '금옥'에 들른 중성지구의 유일한 한국인 최근화(50·신현상행)씨는 "대만 사람들은 돌아온 화교들을 '와이성원'(外省人)이라고 부르며 온전한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귀띔한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 차별 받았던 이들이 대만에서는 '반쯤'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뿌리인 중국과 태를 묻었으나 밀려난 한국, 차별을 피해 스며든 대만, 그 어디도 이들에게 안온한 고향은 못 된다.

결국 한국 화교들은 '상상' 속에서 자기와 동일시해 왔던 중국인들을 중국 본토나 타이완에서 만난 후, 그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극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재국에서 느끼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모국에서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들이 결국 그 어느 쪽과도 완전히 같지 않은 독특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동질성과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런 인식은 한국인이나 중국인 그 어느 쪽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즉 '한화'라는 자기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쪽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한화'라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형성된 것이다.

화교 개개인이 혈통, 국적, 역사 의식, 문화 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자기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정서와 생활을 몸에 익히고 자라난 화교 3, 4 세대들 가운데서는 한국과 중국 그 어느 쪽과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종족으로서의 '한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특히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화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모국과의 문화적 연속성보다 주재국에서의 현실적 적응과 문화적 동화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로서의 정체성은 국내 화교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재국 사회의 배척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화교들이 자기 속의 중국성과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현재 국내 화교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조건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 화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자기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변화와 전망

최근 국내 화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 영역에서 발생했다. 그 변화 중에는 외국인 전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화교들에게만 국한된 것들도 있다. 또 화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주로 그들의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여기서는 먼저 국적과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적 규정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원래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에 바탕을 둔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외국인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이 될 수 없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라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또,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반면,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7년에 개정되어 1998년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적법은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원칙에 부합되게 부계 혈통주의를 포기하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sup>18)</sup> 이에 따라,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들은 출생장소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자를 불문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후에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화교와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대부분 화교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정은 화교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길을 다소 넓혀준 결과를 가지었다.

국내 화교 가운데 귀화자가 적었던 것이 이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탓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조건들 역시 한 몫을 했다.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나 교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교는 극히 드물었다. 최근 개정된 법은 추천서 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낮춤으로써 귀화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밖에도 화교를 비롯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다. 원래 F2 비자를 받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매 3년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또 '제한화교에 대한 특례조치'를 두어 화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한국에 직계가족이 남아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예외로 거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화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국적을 가진 국민과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부분적이고 미봉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좀더 획기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안영도 2001 참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성화교협회는 2000년 7월에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18) 국적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성호(2001)의 논문을 참고하라.

법적 지위 향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거기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민변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초안을 만들어 유관 시민단체와 연명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이 안에는 화교 등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으로 대표되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와,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가 포함되었다. 영주권과 관련된 부분은 정대철·이부영 두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었고, 참정권 관련 부분은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별법"이란 이름의 정부안으로 구체화되어 입법 대기중이다. 만약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화교들로서는 훨씬 더 안정된 법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화교들의 뿌리내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조건의 개선이다. 그동안 이들은 여러 가지 배제와 차별,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을 경험하면서 상당수가 대만, 미국, 일본 등지로 빠져나갔고, 남은 사람들 역시 주류사회로 편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법 개정으로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이 없어진 것을 들 수 있다. 구법인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50평 이상의 상점이나 2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6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관련된 제한을 없앴으로써 화교들의 재산 보유와 증식을 가로막던 큰 걸림돌을 치우게 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과거 주변적 존재로 취급 받아온 국내 화교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서 그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화교자본 유치의 다리이자 차이나타운 건설의 참여 주체로서 아주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천지역의 예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인천시는 1998년부터 송도지구에 차이나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그에 필요한 자본의 상당 부분을 해외 화상(華商)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산업자원부의 물밑 작업을 통해 1999년 5월에 결성된 화교경제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인천시는 1999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산업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화상투자포럼'을 개최했다.<sup>19)</sup> 여기에는 타이완·홍콩·싱가포르 등의 화교 기업인 70여 명이 참석하여 인천 내 차이나타운 건설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총액수가 3억 달러를 상회했다.

인천시의 계획에 따르면 차이나타운은 200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송도지구 1공구의 일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곳은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금융과 유통이 중심을 이루고 관광은 부수적이다.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유료로 대지를 분양하거나 장기임대를 할 것인데, 과연 그런 정도로 해외 화교자본을 순조롭게 끌어들이려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지제공 조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외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려는 화교경제인연합회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은 송도지구 개발에 필요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내 화교들이 거기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9) 화교경제인연합회는 이 회의 이후에도 세계화상대회 참여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 않는다. 화교경제인연합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인천시와 협조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하여 사업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 차이나타운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곳을 채울 중국인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내 화교들은 얼마나 그곳에 들어갈 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하다. 이에 비해, 인천시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건립 계획은 지역 화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인천 중구청은 1998년에 기존의 자유공원 주변 화교 정착촌을 전면적으로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입안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민자 유치에 의한 제3자 개발 방식을 내세운 이 계획은 옛날 청관(淸館)의 음식, 풍물, 향수가 깃들여있는 역사적 건물들을 복원하고 화교들의 생활문화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 여론에 밀려 기존 건물의 복원과 관광사업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중구청은 이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화교, 중국 산둥성과 웨하이시, 미국 화교 등을 대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광과 유통 중심의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중구청은 인천역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차이나타운의 경계를 표시하는 패루를 설치함으로써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을 시작했다. '중화가'(中華街)라는 편액을 붙인 이 패루를 설치하는 작업은 중구청과 자매관계에 있는 산둥성 웨하이시 환취지구(環翠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패루는 환취지구 정부가 중국 국내의 기술진에 맡겨 제작했으며, 완성된 조립식 패루는 기술자들과 함께 인천으로 보내져 현재의 위치에 설치되었다. 기술자들의 숙식과 기초공사를 중구청이 담당할 것을 제외하고는 패루 제작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환취지구 정부가 부담했다. 여기에는 국내의 원룡(文榮)<sup>20)</sup> 동향회가 기탁한 10만 위안(약 1,500만원)의 성금이 포함되었다.

원래의 계획은 패루 두 개를 세우는 것이었으나 설치 장소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두 번째 패루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최초의 설치 장소인 인천역 맞은 편과 중구청 정문 앞은 환취지구 정부가 현지답사를 통해 후보지로 제시한 것을 중구청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구의회 의원들이 지역민의 반대를 이유로 두 번째 패루의 설치 장소를 자유공원 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된 상태이다. 북성동 동장 말로는, "남의 집 대문"을 중구청 정문 앞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과, 중구청 정문 쪽은 과거 일본 조계지에 속했던 곳이었으므로 그곳에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된 반대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한국인 주민들은, 원래의 계획에 따라 패루를 설치하게 되면 두 패루의 연결선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권이 화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자유공원 쪽에 두 번째 패루를 설치한다면 첫 번째 패루와의 연결선을 따라 한쪽은 화교들이, 다른 한쪽은 한국인들이 상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친 중구청은 두 번째 패루의 설치 위치를 바꾸는 문제를 중국 쪽과 협의했다. 그러나 환취지구 정부는 이미 완성된 패루가 새 위치에는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위치 변경을 거부했으며 원래의 합의를 한국측이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측이 우호적으로 시작했던 패루 설치 사업은 뒤늦은 지역주민의 반대 탓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 채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구청의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을 보며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던 지역 화교들에게 이것은 매우 실망스

20) 산둥 웨하이의 원둥(文登)과 룡청(榮城) 지역을 가리킨다.

런 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는 지역사업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중구청은 패루 설치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인천역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차이나타운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2001년부터 시범거리 조성에 나섰다. 계획에 따르면 시범거리 한쪽에는 중국식 관광상품 판매점들이 들어서고 기존의 중국음식점 거리와 연결된다. 다른 쪽에는 유럽풍 관광상품 판매점들이 들어서며 이곳은 한국음식점 거리로 연결된다. 시범거리에는 예술의 거리, 벼룩시장, 관광쇼핑거리도 들어설 것이다. 이미 도로 포장과 가로등 설치 작업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지중화 사업, 건물 외벽 개조, 주차장 설치, 산등문화관 건립(인천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만약 중구청의 희망대로 이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화교 관련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패루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 중구청과 의회가 취한 입장에서 잘 드러났듯이, 부분적인 지역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화교 중심의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기조가 포기된다면 그것은 차이나타운 조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화교들의 기대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화교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계획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화교들이 여전히 대화의 파트너나 변화의 주체로서보다는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크고 작은 일들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인천시가 처음 송도지구 차이나타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화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으며 화교경제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해외 화교자본 유치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화교들이 자기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화교와의 협력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뤄질 뿐이다. 차이나타운의 건립이 지역 화교사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업 주체에게 전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sup>21)</sup>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인천 중구청은 1999년 4월에 인천 자유공원에서 '자장면대회'를 여는 동시에 각종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자장면이 인천의 화교들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으므로 그것을 내세워 이 대회를 기획한 것이었다. 이 날 자유공원 일대 중국음식점들에서는 이 대회를 기념하여 자장면을 천원에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당국이 가격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중국음식점들에게 통보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화교 문화 상업화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일방성은 화교들이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내 화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라기보다는 아직 피동적인 대상이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적 지위의 보장과 경제적 환경의 개선, 그리고 주체 의식의 고양 등이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화교들의 '한화'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한 뿌리내리기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는 귀화와 문화적 한국화를 통해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선택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국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들은 그동안 냉전체제의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억제 당해온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목소리들을 조금씩 낼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

21) 이것은 본 연구자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의 화교 공동체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이들에게 언젠가 떠나야 할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갈 또 하나의 고향으로 마음 속에 새겨질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사명 외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박은경

1981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진단학보』 제 52 호: 97-128.

1986 『한국 화교의 種族性』, 서울: 한국연구원.

1996 『화교가 밭 붙이지 못한 땅』,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0 『북한 화교 연구 시론』, 『탈분단 시대를 열며』 (조한혜정·이우영 편), 서울: 삼인.

### \*석미령

1999 『한국화교교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 \*안시현

1998 『한국 화교 청소년의 생활상과 종족성』,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사학위 논문.

### \*안영도

2001 『화교의 법적 지위와 영주권 제도의 필요성』, 국제인권법학회 2001년 연례 학술회의 발표 논문.

### \*우심화

1999 『한국 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국제심포지움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발표논문.

### \*이재정

1993 『한국의 화교 거주지 연구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성호

2001 『한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국제인권법학회 2001년 연례 학술회의 발표논문.

### \*Barth, Fredrick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Cohen, Anthony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and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Heberer, Thomas

1997 『중국 사회변화 과정에서의 종족 부활, 종족 정체성, 그리고 종족 갈등』, 『비교문화연구』 제3호: 131-175.

\*Park, Eun-Kyung

1995 "The Various Phases of Ethnicity: The Chinese Minority in Korea," 『민족과 문화』 제 3 집: 39-56.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화교촌 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1998)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2000)

\*韓國仁川華僑概況與沿革(1998)

\*韓國仁川華僑協會僑情簡報(2000)

\*韓華教師聯誼會 자료

메모 하세요

